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Ⅲ

Structural Changes of the Korean Economy
and Response Strategy Ⅲ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III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총괄 | 이정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진익 경제분석총괄과장

작성 | 신동진 인구전략분석과장

박승호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지원 | 임윤주 경제분석총괄과 행정실무원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부문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를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02) 6788-3780 | ea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202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의 심의 (2020. 7. 1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요 약

I. 서 론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산업구조변화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그리고 무역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

II. 산업구조변화

1. 제조업의 성장 둔화

가. 생산 및 고용 변화

- 우리나라 제조업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하락함으로써 제조업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이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11.7%에서 최근(2010~2018년, 이하 동일)에는 26.6%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에,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년대 18.0%에서 최근에는 3.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 이에 따라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도 1970년대 3.5%p에서 2010~2018년까지 1.1%p로 약 2.4%p 하락
-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경공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증가하여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음식료 관련 제조업은 1970년 20.3%에서 2019년 4.9%로, 섬유 및 가죽제품은 26.1%에서 3.4%로 감소
 - 반면에 금속가공 관련 제조업은 1970년 1.0%에서 2019년 7.3%로, 컴퓨터·전

자 및 광학기기는 동 기간에 4.8%에서 26.2%로,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동 기간에 2.9%에서 9.1%로 증가

□ 고용비중을 통해 산업구조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 종사자는 서비스업 종사자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음

-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율은 1995~1999년 2.6%에서 2005~2009년 3.4%를 거쳐 2015~2018년 3.0%로 증가
-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은 1995~1999년 -3.0%에서 2000~2004년 1.5%로 상승하다가 2005~2009년 -0.9%로 감소한 뒤 2010~2014년 4.1%로 반등하였다가 2015~2018년 0.8%로 다시 둔화
 - 2015~2018년 제조업 종사자 평균증가율을 크게 능가하는 업종은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등으로 대부분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인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재편된 가운데, 경공업의 종사자 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동 업종에 종사하던 고용 비중도 감소

- 제조업의 종사자 비중은 1995~1999년 25.5%에서 2005~2009년 20.7%를 거쳐 2015~2018년 19.1%로 감소세를 나타냈음
 - 업종별로 제조업 내 고용 비중이 2015~2018년 2%를 초과하는 분야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3%), ‘컴퓨터 전자 및 공학기기’(2.5%), ‘기계 및 장비’(2.2%) 등으로 중화학이나 ICT 산업 아니면 기계장비산업과 같이 고부가가치 제조업임
 - 반면 과거 1995~1999년 종사자 비중이 높았던 ‘음식료품(2.3%)’, ‘섬유 및 가죽제품(4.5%)’, ‘목재·종이·인쇄업(2.0%)’ 등의 비중은 2015~2018년 각각 1.6%, 1.5%, 0.9%로 감소

나. 생산 정체 및 고용 감소

□ 탈공업화¹⁾ 현상은 제조업의 생산 부문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생산 부문의 성장은 정체

1) 탈공업화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전산업 대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정의

- 한국의 전체 산업 대비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UN 자료 기준)은 1970년 7.7%에서 2018년 29.2%로 증가세를 보이며 탈공업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 독일과 일본과 같이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은 미국 및 영국과 달리 생산 부문에서 탈공업화가 지속되지 않았음
- 다만, 전체 산업 대비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은 2011년 29.6%에서 2016년 28.9%까지 하락하였다가 2018년 29.2%까지 반등하여 생산 부문의 성장이 정체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탈공업화가 제조업의 고용 부문에서 나타났음
 - 전체 산업 대비 제조업의 고용 비중(UN 자료 기준)은 1970년 13.2%에서 1989년 27.8%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8년 16.7%로 하락
 - 1990년 이후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고용 부문에서 탈공업화가 진행 중

다. 낮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진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전환을 추진 중
-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분야가 주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분야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제조 관련 분야, 그리고 소재·나노 분야에서 기술 수준 미흡

2. 서비스업의 성장 정체

가. 생산 및 고용 변화

- 서비스업의 명목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실질 부가가치 비중은 정체를 보임
 - 서비스업의 명목 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 43.8%에서 2019년 62.4%로 18.6%p 증가
 -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과 운수업은 감소하였으나 기타 업종은 증가세
 - 반면,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대 이후 60% 내외에서 정체
 - 미국(80.4%), 영국(79.1%), 독일(68.7%), 일본(69.1%) 보다 낮은 수준
- 서비스업의 고용은 빠른 증가세를 보임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전산업 종사자수는 1993년 1,225만명에서 2018년 2,234만명으로 81.6%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동기간 759만명에서 1,642만명으로 116.3% 증가

나.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낮은 노동생산성

-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가 정체된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
 - 2019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은 2015년 대비 8.8%로 제조업(16.6%)의 절반에 불과하나 업종에 따라 상이
 - 금융 및 보험업의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은 20.9%로 가장 높는데, 이는 고용 감소에 일부 기인
 - 기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은 11.2%(교육)에서 -13.7%(환경)로 격차가 큼
 -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18년 기준 47.5천 달러로, 영국(83.8천 달러), 독일(73.8천 달러), 일본(66.5천 달러) 수준을 하회
 - 이에 반해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18년 기준 94.8천 달러로 일본(90.5천 달러), 독일(93.4천 달러), 영국(96.6천 달러)과 비슷한 수준

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부진

- 200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1인당 경제성장률이 감소한 데에는 물적자본의 기여율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2000년대 서비스업의 1인당 경제성장률은 2.2%p 감소
 - 이 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4%p 증가, 인구 대비 취업자 증가율은 0.9%p 감소한 반면, 물적자본은 1.6%p 감소
 - 2010년대 서비스업의 1인당 경제성장률은 1.3%p 감소
 - 이 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3%p, 인구 대비 취업자 증가율은 0.4%p 감소한 반면, 물적자본은 0.7%p 감소
- 최근 서비스업에 대한 설비투자 추이와 R&D 투자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 투자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감소세를 보임
 -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14년 84.9조원에서 2019년 91.5조원으로 7.8% 증가
 - 서비스업의 설비투자는 2014년 56.4조원에서 2019년 43.4조원으로 23.1% 감소
 -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이 8%(2015년 기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2015년, 14%), 일본(2018년, 12%)의 투자 비중을 하회

라. 경쟁 제한적 규제

-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서비스업의 규제 정도는 제조업을 비롯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편
 - 제조업 전체 저량(누적)규제지수는 2013년 기준 200 미만이었지만 금융 및 보험업만 400에 이를 만큼 높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규제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
- 포지티브 방식²⁾의 규제로 인해 신사업의 시장 진출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규제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³⁾으로 변경
 -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는 신사업을 신속하게 시도 및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유예 및 면제해 줌

2)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는 방식

3)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금지사항을 열거하는 방식

- 이에 따라 규제 건수가 2013년 15,269건에서 2019년 13,992건으로 감소하였고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는 2019년 195건, 시장 진출 사례는 58건에 이릅니다
- 이와 같이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돌 등으로 일시적 규제완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면, 카카오T 카풀서비스나 타다의 사례에서처럼 이해관계자와의 충돌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됨

3. 대외 경제여건 악화

가.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

- 세계 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정체 양상
 - 2002~2007년 세계 무역액은 연평균 14.6%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2018년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시현
 - 물량기준 세계수출 증가율도 2002~2007년 연평균 증가율은 6.6%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012~2018년 연평균 2.3%로 하락
 - 세계 무역 증가율 둔화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증가율도 하락세 시현
 -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00~2010년 연평균 11%를 상회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011~2019년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2.1%로 하락

나. 보호무역 기조 확산

- 금융위기 이후 미·중 무역분쟁 등 국가 간 무역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
 - 대표적인 수입규제인 상계관세 조치 및 세이프 가드 건수가 크게 증가
 - 상계관세⁴⁾ 조사 및 발동 건수는 2017년 59건에서 2018년 401건으로 약 5.8배 증가
 - 또한 세이프가드⁵⁾도 동기간 16건에서 78건으로 3.9배 증가

4)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5)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 또한 최근 특정 국가 및 기업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차별적 조치인 비관세장벽도 증가세
 - 기술무역장벽이 2011년 1,773건에서 2018년 3,065건으로 72.9% 증가
 - 비관세장벽은 정책적 요인과 연계되어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보호무역기조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지역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도 증가세
 - 지역무역협정은 2007년 233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기준으로 총 488건이 발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내무역 비중도 증가세
 - 세계 무역 중 역내무역 비중은 2012년 51.0%에서 2017년 54.7%로 확대

다. 중국 경제구조의 고도화

- 중국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가공 무역 비중이 하락세
 - 중국의 전체무역 중 가공무역 비중은 2000~2008년 수출의 53.5%, 수입의 39.4%를 점유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 수출의 29.4%, 수입의 20.1%로 하락
 -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하락은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품목별 수입구조에 변화를 초래
 -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며 2000년 32.7%, 2005년 34.2%에서 2016~2018년 연평균 42.9%까지 상승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주력 품목인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
- 또한 중국의 기술집약형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 중국의 수출은 2010년대 이후 기술집약형 제품의 증가세가 노동집약형 제품의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전체 수출의 성장 흐름을 주도
 - 2000년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신발, 가방 등이었으나 최근 통신기기, 전자 및 자동차 부품, 컴퓨터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
 - 중국의 고기술 제품군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휴대폰 등 통신장비의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 -0.13에서 2019년 0.68로 상승하였으며, 자동정보처리 기기도 동기간 0.42에서 0.66로 상승

라. 수직적 분업구조 약화

□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 간 생산비용 격차 축소 등으로 수직적 분업구조가 약화

- 신흥국의 노동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선진국과 신흥국 간 생산비용의 차이가 축소
 - 2000년 대비 2018년 시간당 노동비용이 중국은 9배, 인도는 2.9배 상승한 반면 미국 0.7배, 독일 0.8배 상승하였으며 일본은 동일한 수준
 - 2000~2018년 연평균 노동비용의 상승률은 중국 13.6%, 인도 7.9% 기록한 반면 독일은 연평균 3.4%, 미국은 3.0% 상승
- 이에 수직적 분업구조가 약화되고 글로벌 분업구조가 생산비용, 시장접근성, 정책적 요인 등에 따라 차별화
 - 생산공장의 위치 선택 기준이 사업성격 등에 따라 저비용 중시, 소비시장 접근성, 리쇼어링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대중국 그린필드 투자⁶⁾는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 미국, EU, 멕시코 등의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

6) 국외자본이 투자할 때 용지를 직접 매입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투자를 받는 국가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

Ⅲ. 산업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공동화

- 산업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수입 확대 및 수출 감소 때문에 타격을 받은 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산업기반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 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
 -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분석한 고바야시 히데오 교수(2003)는 산업공동화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산업 활력과 산업연관효과로 분석
 - 이부형(2016)도 국내 산업 공동화를 제조업 활력과 제조업 해외의존도, 산업연관효과로 분석
 - 본 연구도 선행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을 분석
- 제조업의 성장성을 분석한 결과, 성장성이 둔화되었고,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2000년 38.8%에서 2018년 35.9%로 하락
 - 제조업 출하액 증가율은 2000년 17.0%에서 2011년 32.8%를 거쳐 2018년 3.4%로 하락하여 둔화됨
 -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은 2000년 23.9%에서 2011년 36.7%를 거쳐 2018년 3.7%로 하락하여 둔화됨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도 2000년 9.2%에서 2011년 28.2%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4.0%로 하락하여 둔화
- 제조업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수익성이 2000년 초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매출액세전수익율은 2002년 7.8%에서 2018년 7.3%로 하락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2000년 7.4%에서 2018년 7.3%로 하락하여 수익성이 감소
- 제조업의 투자성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은 2000년 초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2010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
 - 투자를 나타내는 유형자산증가율은 2000년 2.4%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11.2%로 상승한 이후 2018년 5.0%로 점차 하락

- 제조업의 해외직접 투자금액과 신규법인 수,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매출액 규모와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해외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공동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
 -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000년 1,644억 달러에서 2019년 1조 8,347억 달러로 11.2배 증가하였고, 신규법인 수는 2000년 1,097개에서 2019년 1,220개로 확대되어 해외직접투자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매출규모는 2009년 1,575억 달러에서 2017년 3,641억 달러로 2.3배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 국내 제조업 매출규모는 1.6배 증가한데 그쳤음
 - 해외생산비중도 2009년 11.2%에서 2017년 16.7%까지 증가하여 해외생산의존도가 심화되었음
- 제조업의 산업연관효과가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공동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0년 0.663에서 2018년 0.654로 하락
 -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2.006에서 2018년 1.969로 하락
 -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9.8명에서 2018년 7.8명으로 2명이 하락
 - 중간재 국산화율이 2000년 69.9에서 2018년 69.1로 감소하자 국내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도 2000년 0.34에서 2018년 0.35로 상승

2.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불균형 심화

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 상품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적자를 기록
 - 상품수지는 2015년 1,203억 달러까지 증가한 반면 서비스수지는 1991년 이후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2017년 367억 달러 적자를 기록
 -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설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가운데 운송수지가 글로벌 해운업황의 부진과 국내 해운업계 구조조정으로 2016년부터 적자를 기록
 - 가공수지, 여행수지, 기타사업서비스수지,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적자를 기록

-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는 국내 중소기업 중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기전자제품의 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가 주를 이루는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 업종 간 임금 격차 증가

- 서비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 간의 생산성 차이는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의 정규직 비중이 약 80~90%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은 평균 60%대로 낮음
 - 서비스업 부문 간에도 격차가 큰데, 정보통신이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80% 이상인 반면 사업서비스는 약 40%에 불과
 - 산업별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월임금총액은 650.2만원인 반면 제조업은 401.7만원, 광업은 397.7만원의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보험업이 623.6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문과학 및 기술업이 490.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187.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3.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의 위험

가. 수출주도 성장의 동력 약화

-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경제성장⁷⁾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세계무역 정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주도 성장이 어려움에 직면
 - 우리나라 경제가 높은 대외의존도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증가율이 하락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감소
 -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수출입액/명목GDP)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기간 평균 58.9%를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2018년 평균 76.8%로 상승

7) 수출주도 성장은 수출을 통한 해외수요 확대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 국내시장의 구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수요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산업화를 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방식

-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2001~2008년 연평균 12.5%에서 2011~2019년 2.1%로 하락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동기간 연평균 4.9%에서 2.9%로 하락
- 또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내수(민간소비, 민간투자, 설비투자) 증가율도 하락세를 시현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1~2008년 연평균 3.9% 증가하였으나 2011~2019년 2.3%로, 민간투자 증가율은 동기간 4.3%에서 2.8%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3.8%에서 2.5%로 하락

나. 주력 품목의 수출 경쟁력 약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세

- 우리나라 전체 공산품(Manufactures)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4.12% 수준에서 2018년 4.02%로 하락
- 최근 수출 주력품목인 철강, 자동차, 통신기기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하락
 - 우리나라 철강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0년 5.79%에서 2015년 6.15%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하며 2018년 5.96%를 기록
 - 통신장비도 2010년 6.56%에서 2018년 1.53%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자동차 등 운송장비의 수출점유율은 2010년 6.33%에서 2018년 4.01%로 하락
 - 한편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전자부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8.94%에서 2018년 17.79%로 상승

□ 우리나라 주력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

-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경쟁력 하락
 - 자동차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83, 2015년 0.62, 2019년 0.56으로 하락하였으며 자동차부품은 2015년 0.68에서 2019년 0.62로 하락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조선업 등의 수출경쟁력도 하락세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무역특화지수는 2015년 0.73에서 2019년 0.62로 하락

- 무선통신기기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58에서 2019년 0.02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86에서 2019년 0.79로 하락
- 한편 반도체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21에서 2019년 0.33으로 상승

다. 수출집중도 심화 및 신시장 창출 어려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

- 상위 3개 교역대상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10년 41.8%에서 2015년 45.8%로 상승하였으며, 2018~2019년에는 47.1%를 기록
 - 상위 5개, 상위 10개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가파르게 상승하며 상위 5개 국가 수출비중은 2010년 50.5%에서 2018~2019년 59.1%, 상위 10개 국가 수출비중은 2010년 62% 수준에서 2018~2019년 71%로 상승
- 지역별로도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편중도가 높은 상황
 - 2010년 이후 10대 수출국 중 아시아 국가가 7~8개를 점유하는 상황으로 2018~2019년의 경우 10대 수출국 중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8개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편중
 - 아시아 수출 상위 8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2001년 41.9%였으나 2010년 49.4%, 2018~2019년 56.4%로 상승

□ 우리나라 수출의 1/4 이상을 점유하는 대중국 수출이 중국 경제고도화 등으로 둔화되고 있어 대체시장 발굴 등이 필요한 상황

-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
 -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증가율은 2003~2011년 동안 연평균 20%에 육박했으나 2012년 이후 5%이하로 하락
 - 2016~2017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16.0% 감소
-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대체시장 발굴이 필요

- 또한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의 변화에 취약한 상황
 - 우리나라는 상위 3대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아지는 상황
 - 2001년 상위 3대 수출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전체수출 중 25.8%였으나 2018~2019년 34.1% 수준으로 8.3%p 상승
 -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심화되며 반도체의 수출비중이 2001~2015년 10%내외 수준에서 2018~2019년 19.2%로 상승
 - 한편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13개 수출 주력품목 중 2018년 5개 품목, 2019년 9개의 품목의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세를 나타내며 수출품목의 집중 및 불균형에 따른 리스크가 심화되는 양상

IV.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1. 제조업 기반 강화

가. 제조업 고도화

- 우리나라가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에서 벗어나 세계 제조업 순위 6위에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고도화 방안이 필요
 - 산업부흥정책 수립 및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조업 혁신 필요
 - 주요국은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도록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산업부흥정책을 수립
 - 미국은 주요 기업(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들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
 - 중국도 연구 인프라 개선, 풍부한 데이터 등에 힘입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
 - 독일 및 일본도 강점을 나타내는 3D 프린팅, 로봇기술 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AI 분야 등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수준이 한국 4차 산업혁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융·복합으로 개선될 필요

- 디지털(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혼합현실 등), 바이오, 에너지, 제조관련 로봇, 스마트 자동차, 3D 프린팅, 서비스 로봇과 소재나노 등 분야에서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기술수준
- 또한, 공장의 해외이전에 의한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포함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중장기 산업발전비전 확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
 - 특히, 해외이전부문을 대체할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업 분야, 그리고 부품·소재·장비 등 생산기반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
-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화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필요

- 국제교역이 가능한 노무 및 세무, 규제 환경 개선
 -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반적 경영환경 만족률은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은 26.7%로 2017년 27.3%에 비해 소폭 하락
 -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2019년 13위(79.6점)로, 1위인 싱가포르와 비교해 보면, 노동시장(-18), 금융시스템(-7), 제도(-14), 생산물시장(-25) 부문에서 취약
-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규제·세무환경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규제 완화는 규제 방식의 전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규제 합리화의 노력의 지속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
-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중간재 성격을 지닌 노무 및 세무 행정, 금융, 보험, 법률, 회계 및 컨설팅의 경우 국제표준의 도입과 더불어 고급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

다. 리쇼어링 활성화

□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리쇼어링 활성화 필요

-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적이 낮음
 - 유탄기업실적은 2014년 이후부터 2019년 9월까지 65개에 불과
-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및 규제 완화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 대상 조사」에 따르면 향후 해외사업장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기업의 93.6%가 ‘현행유지 또는 동일지역 내 확대’라고 답변
 - 전체 응답기업의 93.6%인 기업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생산비용 상승’(66.7%),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0%)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요인과 유사
 - 기존 사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규제 방식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내복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
- 북한과 가까운 남한지역에 남북경협 특구 설립을 통한 해외투자기업 국내 복귀 활성화
 -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남북경협 특구에 대한 논의 가능
 - 2016년 2월 잠정적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은 125개사가 참여하고 5.5만 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는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사례
 - 개성공단이 투자처로서 장점을 지녔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등 안전성 측면에서는 제약이 있으므로, 북한과 가까운 남한 지역에 남북경협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것이 대안으로 가능

2.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가. 서비스업의 세계화

-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세계화를 위한 육성정책이 필요
 - 산업이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
 - 협소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서비스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요가 해외에서 충족되는 사례가 증가
 - 수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운 제조업처럼 서비스업의 세계화를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
 -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경우 부가가치와 산업연관효과가 큰 정보·통신·컴퓨터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여건 개선,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 지적재산권 획득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산학연 집적 클러스터 중심의 연구개발 및 투자 생태계 마련, 인력수급 정책 등을 시행
 - 그 결과, 해당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세계 연평균 성장률(6.8%)을 상회하는 10.9%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1,011억 달러 수출(세계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 수출의 16.7%)로 해당 업종 세계 수출 1위를 기록

나. 서비스업의 투자 확대

-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으로 인해 노동력의 추가 투입만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 확대가 필요
 -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업의 영세성,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취약, 공공서비스의 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이 민간부문의 서비스 투자 증가의 지체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점에서 민간 서비스 투자의 마중물로서 정부 서비스 육성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
 - 정부는 2000년 이후 서비스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
 - 그 이유로 기초연구 보다 기술기반 위주의 서비스 R&D 지원과 사업화로의

연계성 미흡,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보증공급의 부족,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과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업종과 지역의 편중, 규제개혁 지연 등이
지적됨

- 정부는 최근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제시
 - 중점 내용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 해소, 표준화·정보화·연구개발을 통
한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유
망 서비스업에 대한 체감형 성과 도출 등을 제시
- 이런 전략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이질성과 서비스업
내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이 필요
 - 예를 들면, 서비스 분야의 혁신은 기술혁신 자체 보다 사업모델, 유통방법,
고객 인터페이스에 대한 솔루션, 공급사슬 등에 영향을 더 받음
 - 서비스업의 다양성으로 정부 지원이 자칫 일부 업종 또는 특정 기업군에 편
중될 수 있음

다. 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서비
스의 사업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
 - 예를 들면,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후 1년 동안 102건의 서비스가 지정되었
고 이 중 36건이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투자와 고용, 해외진출이 증가
 -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장에 진출될 때 이해관계자와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사업성 등을 검증할 기회를
마련하였으나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 예를 들면, 호주 정부는 우버서비스 도입 시 부담금을 도입한 후 이를 택시업계
를 위해 사용하도록 기금화를 추진
 - 한편 호주 정부는 택시업계에도 관련 세금을 낮춰주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우버서비스와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지원

3. 내수와 수출간 균형 성장 모색

가. 내수시장 확대

- 최근 수출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내수부문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수확대를 견인할 주력산업의 육성, 수출과 내수간 균형성장 추진, 안정적 수요 기반 구축 등이 필요
 -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할 주력산업을 찾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
 - 경제성장에 따른 잠재수요가 큰 여행, 여가 및 문화 산업, 헬스케어 산업 등과 관련된 시장을 확대할 필요
 - 또한 내수 관련 주력산업 부문의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 수출과 내수가 균형있게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R&D 투자 확대, 민간부문의 혁신 환경 조성 등으로 수출제조업의 경쟁력 확대 노력을 지속
 - 또한 내수지원 정책이 수출경쟁력을 과도하게 떨어뜨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도 필요
 - 내수시장 창출을 위한 안정적 수요확대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소비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보장 등에 대한 강화를 통한 안정적 소비심리가 유지되도록 노력
 - 내수부문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나 경제시스템을 수정하고 소비 관련 산업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도 개선할 필요
- 또한 국내경제와 무역부문의 균형성장을 위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할 필요
 - 리쇼어링 확대를 통해 ‘국내생산 증가 → 수출 증가 → 설비투자 및 소득 증대 →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강화 가능
 - 이를 위해 규제개선, 세제혜택, R&D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및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

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1) 수출시장 다변화

□ 수출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

-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4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 의존적인 수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
 - 대중국 수출의 70%를 점유하는 중국의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자본재, 소비재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전략을 전환할 필요
- 탈중국화의 결과로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공급망을 선점하고 중국시장을 공략하였던 범용중간재 수출을 확대할 필요
 - 한편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낮은 유럽지역,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 대한 공략을 강화할 필요

□ 또한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위해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 이외에 소비재 등의 수출확대를 검토할 필요

- 기존 수출품목의 수출 경쟁력은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발전전망이 높은 소비재 등에서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
 -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추세에 맞는 다품종 소량 생산형 수출 체제를 강화하고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
 - 수출 유망 품목 발굴, R&D 및 마케팅 강화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해외네트워크 및 진출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2) 수출경쟁력 제고

□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양적 성장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및 부가가치 중심의 구조로 변화할 필요

- R&D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 뿐 아니라 마케팅, 디자인, A/S 등 가치사슬의 전후방 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필요
 - 다양한 유통망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추진할 필요

-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수출 지원 방안도 검토

다. 대외통상 강화를 통한 시장접근성 제고

- 대외통상을 강화하여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고 시장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중요한 무역대상국에 특화된 통상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국내 기업 및 소비자와 소통함으로써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
 - 또한 대외 여건에 민감한 수출입 품목을 산업별로 면밀히 파악하여 대외통상 정책 등을 통해 시장접근성을 제고
-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고도화 및 신규 FTA 확대가 필요
 -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체결된 FTA를 고도화하고 활용성을 개선
 - 단계적 무역협정의 고도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필요시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통해 시장 활용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
 - 또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FTA 역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
- 부상하는 신흥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통상부문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
 - 공적개발원조(ODA)⁸⁾ 등 호혜적 통상정책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
 - 또한 정부 부처, 기관,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전략의 추진이 필요
 - 주요 신흥국가와 전략적 통상관계를 구축하고 정부·기관·기업 협력시스템을 통해 수출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 투자진출 등 현지화 중심의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

8)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증여, 차관, 배상, 기술형태 등의 형태를 취함

차 례

I. 서 론 / 1

II. 산업구조 변화 / 3

1. 제조업의 성장 둔화	4
가. 생산 및 고용 변화	4
나. 생산 정체 및 고용 감소	8
다. 낮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	10
2. 서비스업의 성장 정체	14
가. 생산 및 고용 변화	14
나.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낮은 노동생산성	18
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부진	20
라. 경쟁 제한적 규제	24
3. 대외 경제여건 악화	28
가.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	28
나. 보호무역 기조 확산	30
다. 중국 경제구조의 고도화	34
라. 신흥국 경제의 부상과 수직적 분업구조 악화	37

III. 산업구조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42

1. 제조업 공동화	42
가. 제조업 활력 감소	43
나. 해외의존도 심화	46
다. 산업연관효과 감소	48
2.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불균형 심화	49
가.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49
나. 업종 간 임금 격차 증가	52

3.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의 위험	54
가. 수출주도 성장의 동력 약화	54
나. 주력 품목의 수출 경쟁력 약화	59
다. 수출의 편중도 심화 및 신시장 창출 어려움	62

IV.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 67

1. 제조업 기반 강화	67
가. 제조업 고도화	67
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69
다. 리쇼어링 활성화	73
2.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77
가. 서비스업의 세계화	78
나. 서비스업의 투자 확대	79
다. 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	81
3. 내수와 수출간 균형 성장 모색	83
가. 내수시장 확대	83
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85
다. 대외통상 강화를 통한 시장 접근성 제고	89

참고문헌/ 92

표 차례

[표 1] 제조업의 성장률(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6
[표 2]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 및 비중 추이	7
[표 3] 주요국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 비교	12
[표 4] 서비스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16
[표 5] 서비스업 고용 증가율 및 비중 추이	18
[표 6] 서비스업의 1인당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21
[표 7] 서비스업 특성별 노동생산성	22
[표 8] ICT생산자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22
[표 9] 업종별 설비투자 추이	23
[표 10] 중국의 10대 수출 품목 변화	36
[표 11] 산업별 월근로시간 및 임금총액	53
[표 1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간 상관계수 추이	56
[표 13] 글로벌 수출점유율 및 순위 추이	57
[표 14] 우리나라 수출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60
[표 15]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별 무역특화 지수	61
[표 16] 우리나라 수출의 국가별 점유율 추이	63
[표 17] 중국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상관계수 변화	64
[표 18] 우리나라 수출의 품목별 점유율 추이	65

그림 차례

[그림 1] 제조업의 실질GDP 비중 및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4
[그림 2] 산업별 성장기여도 추이	5
[그림 3] 업종별 명목부가가치 비중 추이	5
[그림 4]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	8
[그림 5] 주요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 변화 추이	9
[그림 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명목 부가가치 비중 추이	14
[그림 7] 서비스업의 업종별 명목 부가가치 비중	15
[그림 8]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15
[그림 9] 주요국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15
[그림 10] 업종별 고용 비중 추이	17
[그림 11] 주요국 서비스업 고용 비중 추이	17
[그림 12] 업종별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19
[그림 13] 서비스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19
[그림 14] 주요국간 산업별 노동생산성 수준 비교	20
[그림 15] 주요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및 R&D 투자 비중	24
[그림 16] 표준산업분류별 저량 및 유량 규제지수	25
[그림 1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	26
[그림 18] 규제 샌드박스 개념도	27
[그림 19] 세계 무역규모(금액) 추이	28
[그림 20] 세계 수출 물량지수 추이	28
[그림 21]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율	29
[그림 22] 세계 중간재 교역 비중	29
[그림 23] 기간별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30
[그림 24] 우리나라 수입 추이	30
[그림 25] 연도별 상계관세 및 셰이프가드 건수	31
[그림 26] 연도별 기술무역장벽(TBT) 통보건수	32
[그림 27] 지역무역협정(RTA) 추이	33
[그림 28] 역내무역 비중 변화	34

[그림 29] 중국 수출 증가율	35
[그림 30] 중국 수입 증가율	35
[그림 31] 중국 가공무역 비중_수출	35
[그림 32] 중국 가공무역 비중_수입	35
[그림 33] 신흥국의 GDP 및 세계교역 점유율	37
[그림 34] GDP대비 교역 비중	37
[그림 35] 신흥국의 대선진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38
[그림 36] 신흥국 수출구조 변화	38
[그림 37] 주요국 단위 시간당 노동 비용 변화	39
[그림 38] 생산비용 중시 그린필드 FDI	40
[그림 39] 시장접근성 중시 그린필드 FDI	40
[그림 40] 수직적 분업구조 변화 유인	41
[그림 41] 공동화의 정의	42
[그림 42] 제조업 성장 관련 지표 증감률 추이	43
[그림 43] 제조업 생산액 대비 생산비 및 부가가치 비중	44
[그림 44] 제조업 수익성 관련 지표 추이	45
[그림 45]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 추이	45
[그림 46]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46
[그림 47] 국내 및 해외직접투자 제조업 매출액	47
[그림 48] 제조업 해외생산비중 연도별 추이	47
[그림 49] 제조업(공산품)의 산업연관효과 추이	48
[그림 50] 제조업(공산품)의 국산화율 수입유발계수 추이	49
[그림 51] 경상수지 추이	50
[그림 52] 서비스수지 추이	50
[그림 53]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51
[그림 54] 거래상대국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51
[그림 55]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51
[그림 56] 주요국 전기전자제품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51
[그림 57]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액 추이	52
[그림 58] 세계 서비스 무역액 추이	52
[그림 59] 산업별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중	52
[그림 60] 서비스업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중	52
[그림 61] 우리나라의 무역 및 수출 의존도 추이	54

[그림 6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추이	55
[그림 63]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민간소비/민간투자/설비투자) 추이	56
[그림 64] 우리나라 수출점유율 추이	57
[그림 65] 제조업 고도화	69
[그림 66]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70
[그림 67]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72
[그림 68]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73
[그림 69] 리쇼어링 활성화	77
[그림 70] 서비스업의 세계화 전략	79
[그림 71] 서비스업의 투자 증대 전략	81
[그림 72] 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 전략	82
[그림 73] 내수시장 확대 전략	84
[그림 74]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비중	85
[그림 75] 지역별 신흥국의 글로벌 소비 점유율	87
[그림 76] 수출시장 다각화 및 제품 차별화 전략	88
[그림 77] 단계적 지역무역협정	90
[그림 78] 대외통상 강화를 통한 시장 접근성 제고	91

I.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8.9%에서 1980년대 9.5%에 도달한 뒤 1990년대 6.9%에서 2000년대 4.6%를 거쳐 2010년대에 3.0%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값싼 노동력과 수출촉진을 위한 저리(정책자금)의 자본으로 요소투입을 증대시켜 고도성장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요소투입 증대를 통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성장률 하락이 대내외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전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이 둔화되고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 확대 및 수출 감소로 타격을 받은 제조업 부문은 해외로 이전되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 제조업의 수익 및 투자의 하락과 해외생산 의존도의 심화로 제조업의 전·후방연쇄효과가 약화되고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실질부가가치 비중 증가가 정체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수요가 해외에서 충족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업종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면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 성장률의 정체, 보호무역기조의 강화, 중국 경제구조의 고도화, 수직적 분업구조의 약화로 둔화되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 및 특정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ICT를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도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위험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제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내외 리스크에 내성을 지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Ⅱ장에서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무역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여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산업구조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 공동화’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불균형 심화’, 그리고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의 위험’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제조업 기반 강화’,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내수와 수출간 균형 성장’의 관점에서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산업구조 변화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는 외부적 또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산업간 불균형(구조변동)이 조정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¹⁾ 산업간 불균형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수요변화(소비선호 변화에 의한 산업간 불균형 등)와 공급변화(공급구조변화 등), 기술변화를 들 수 있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산업정책과 규제 등을 들 수 있다.²⁾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Clark(1957)가 산업구조 변화를 생산 부문의 부가가치비중의 변화로 설명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Rowthorn and Ramswamy (1998)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용 비중의 변화로 설명하였다.³⁾ Clark(1957)의 산업구조변화이론은 소득수준변화에 따라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을 거쳐 3차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영국과 미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 등과 같이 영국과 미국과 경제발전단계는 비슷하지만,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국가 간 제조업의 비중차이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영국과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데에서 해답을 찾는 탈공업화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⁴⁾ 여기서 탈공업화는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용 및 생산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데,⁵⁾ 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생산(부가가치)⁶⁾ 및 고용 부문의 변화로 설명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들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 1) Peters, H. -R, *Sektorale Strukturpolitik*, Oldenbourg, München, 1988, 20쪽. 여기서 산업구조란 주로 생산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산업별 (1) 산출량, (2) 고용구조, (3) 무역구조, (4) 임금구조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산업구조의 가장 기초적인 평가기준은 산업별 산출량이며, 최근에는 고용이나 생산성도 함께 활용되고 있음
 - 2) Peters, H. -R, *Sektorale Strukturpolitik*, Oldenbourg, München, 1988, 32~34쪽.
 - 3) Rowthorn, R. E, and Rama Ramaswamy, “ Growth, Trade, and deindustrialization”, IMF Staff Papers, 46, Washington: IMF, 1998.
 - 4) 이갑수,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론」, 2007, 111쪽.
 - 5) Rowthorn and Ramaswamy, “Deindustrialization: Causes and Implications”, *IMF Working Paper*, WP/97/42, 1997.
 - 6) 논의 초기에는 산업구조변화의 기준으로 명목생산(부가가치) 비중이 사용되었으나, Summers (1985)가 실질생산(부가가치) 비중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실질생산부가가치 비중이 사용됨(임현준, “우리나라 탈공업화 현황과 대응방안”, 경제분석, 한국은행,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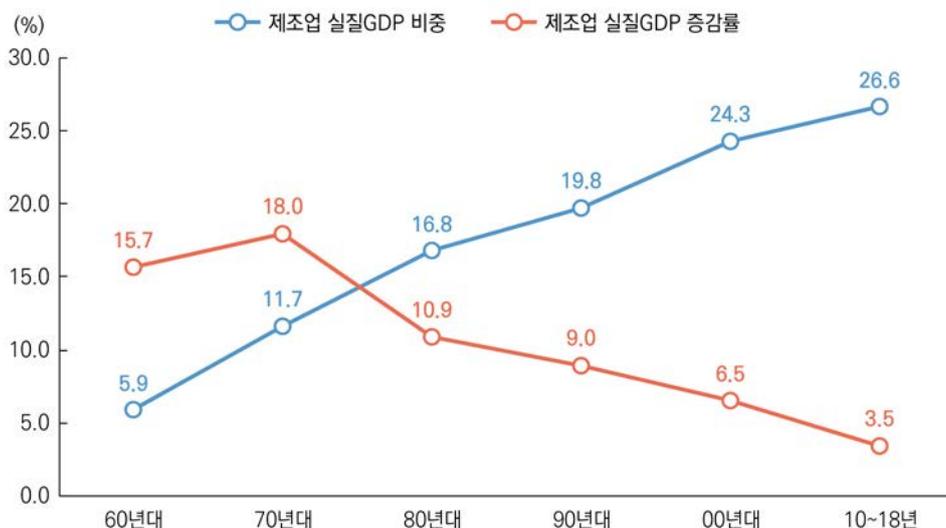
1. 제조업의 성장 둔화

가. 생산 및 고용 변화

제조업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⁷⁾ 따라서 기업이 1차 산업의 원자재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에서 생산한 제품인 중간제품이나 반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품화하거나, 모든 형태의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혁신, 재생하는 일도 제조업에 속한다.⁸⁾

국내 제조업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실질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대 11.7%에서 2010~2018년 26.6%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에,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은 동기간 18.0%에서 3.5%로 하락하였다.

[그림 1] 제조업의 실질GDP 비중 및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주: 각 구간 단순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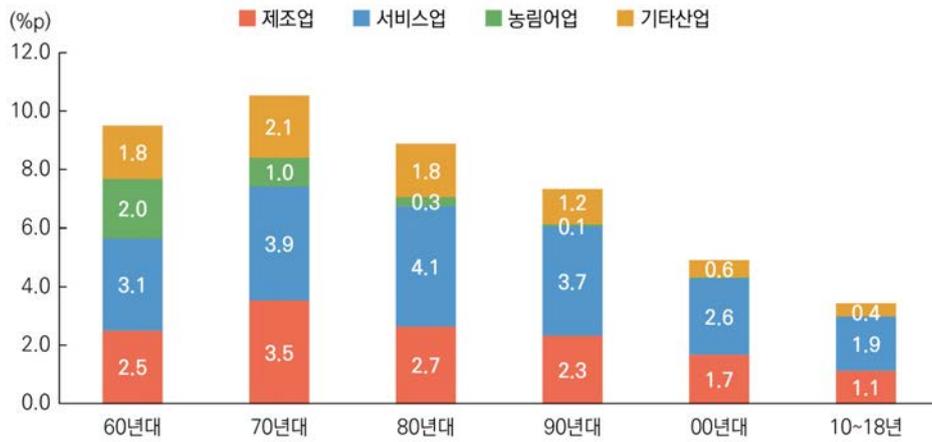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제조업의 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970년대 3.5%p에서 2010~2018년 1.1%p로 약 2.4%p 하락하였다.

7) 통계청, 「통계용어사전」

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 (<http://encykorea.ask.s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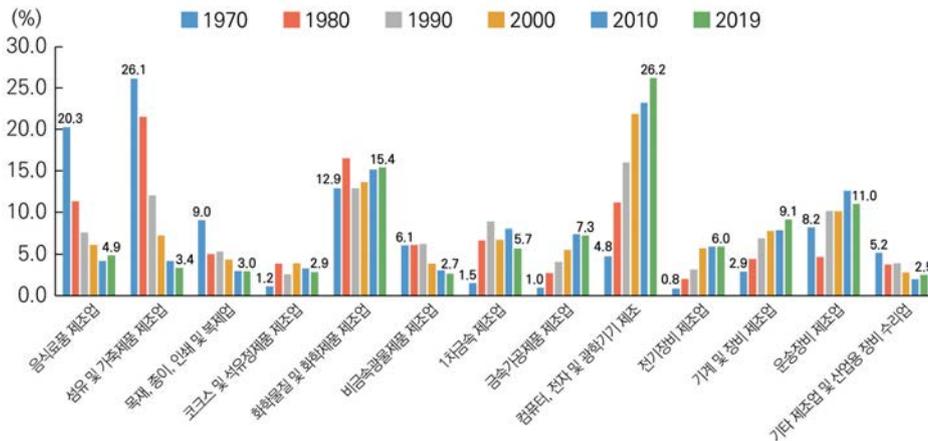
[그림 2] 산업별 성장기여도 추이



주: 기타산업 기여도는 전산업 성장률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의 기여도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원계열 실질기준)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경공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 관련 제조업은 1970년 20.3%에서 2019년 4.9%로, 섬유 및 가죽제품은 26.1%에서 3.4%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금속가공 관련 제조업은 1970년 1.0%에서 2019년 7.3%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는 1970년 4.8%에서 2019년 26.2%로,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2.9%에서 9.1%로 증가하였다.

[그림 3] 업종별 명목부가가치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1970년대 10.6%에서 2010~2018년 3.4%로 7.1%p 하락한 가

운데 제조업 성장률(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동기간 18.20%에서 4.1%로 14.1%p 하락하여 국내총생산 증가율 대비 2배 수준의 낙폭을 기록하였다. 한편 2010~2018년 기준 제조업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업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수리업’으로 나타났으며 ‘섬유·가죽제품’ 등 여타 나머지 산업들은 제조업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최근 ‘기계 및 장비’, ICT산업과 관련이 높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산업의 성장률이 제조업 평균성장률을 상회하고, 저부가가치 품목인 ‘섬유·가죽제품’ 등의 성장률이 평균성장률을 하회하는 것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제조업의 성장률(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단위: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8
국내총생산	10.6	8.8	7.2	4.9	3.4
제조업	18.2	10.9	9.0	6.5	4.1
음식료품	11.7	5.8	2.7	1.4	2.4
섬유 및 가죽제품	17.8	5.6	-0.8	0.2	-0.1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14.3	11.1	3.5	1.6	1.3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20.6	11.9	13.7	3.5	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3.4	8.7	10.3	4.7	3.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2.5	8.0	5.2	4.1	3.0
1차금속	29.8	13.2	5.0	1.6	2.8
금속가공제품	22.1	15.8	10.6	4.8	3.1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35.1	16.9	16.8	15.0	7.8
전기장비	35.6	17.7	13.6	7.6	3.5
기계 및 장비	31.0	13.8	10.3	7.6	5.8
운송장비	20.0	16.0	11.7	6.7	1.5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수리업	12.4	13.0	0.9	2.7	5.3

주. 실질GDP 기준 연중 성장률을 기간별 기하평균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

고용비중을 통해 산업구조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율은 1995~ 1999

년 2.6%에서 2005~2009년 3.4%를 거쳐 2015~2018년에 3.0%로 상승하였다. 반면에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은 1995~1999년 -3.0%에서 2000~2004년 1.5%로 상승하였다가 2005~2009년 -0.9%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은 2010~2014년 4.1%로 상승하였다가 2015~2018년 0.8%로 다시 둔화되었다.

2015~2018년 기준 제조업 전체 종사자 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업종은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수리업’ 등으로 대부분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으로 나타났다.

[표 2]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 %)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8	
	증감률	비중								
전산업	0.5	100.0	2.8	100.0	2.6	100.0	3.4	100.0	2.8	100.0
서비스업	2.6	66.9	3.3	70.8	3.4	72.9	3.2	73.2	3.0	73.4
제조업	-3.0	25.5	1.5	23.6	-0.9	20.7	4.1	19.9	0.8	19.1
음식료품	-0.8	2.3	0.9	2.1	-1.7	1.8	3.0	1.6	2.9	1.6
섬유 및 가죽제품	-7.5	4.5	-4.4	3.4	-6.2	2.0	1.7	1.7	-1.7	1.5
목재·종이·인쇄·복제업	-3.9	2.0	0.4	1.7	-7.2	1.2	2.6	0.9	1.0	0.9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4.4	0.1	0.6	0.1	-3.1	0.1	0.7	0.1	2.5	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7	2.5	4.1	2.5	-0.8	2.3	4.8	2.3	2.3	2.3
비금속광물제품	-7.3	1.0	-1.5	0.8	-1.6	0.6	1.9	0.6	1.7	0.5
1차금속	-2.1	0.9	1.4	0.9	1.8	0.8	4.7	0.8	-0.2	0.8
금속가공제품	-1.3	1.9	4.8	1.9	2.9	2.2	4.6	2.2	0.8	2.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2	2.9	4.7	3.2	-2.3	2.9	4.2	2.8	-0.5	2.5
전기장비	-2.3	1.1	3.8	1.2	2.7	1.2	4.9	1.2	2.0	1.2
기계 및 장비	-2.6	2.5	2.3	2.4	-1.1	2.1	5.7	2.2	2.0	2.2
운송장비	-1.3	2.6	2.3	2.4	3.3	2.6	4.7	2.6	-1.7	2.4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 수리업	-4.1	1.1	-1.1	1.0	2.0	0.9	2.8	0.8	3.2	0.9

주: 실질GDP 기준 연중 성장률을 기간별 기하평균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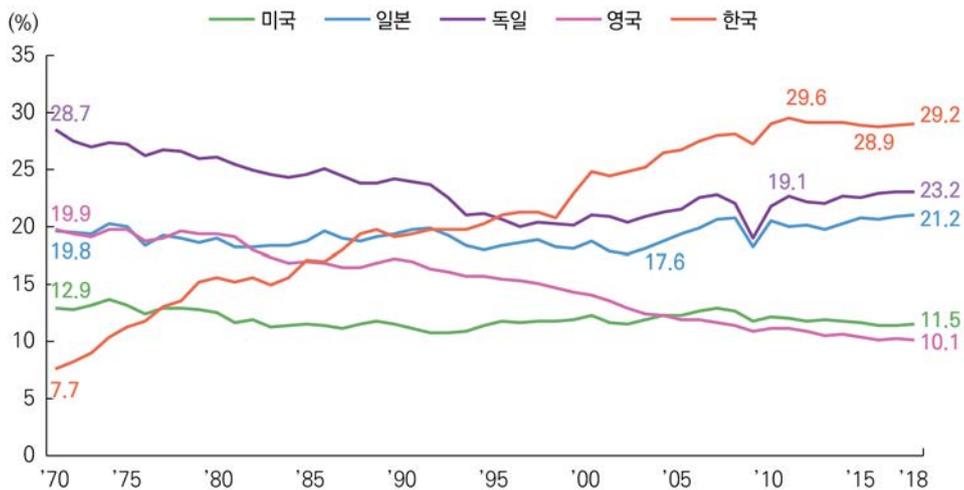
또한, 제조업의 종사자 비중은 1995~1999년 25.5%에서 2005~2009년 20.7%를 거쳐 2015~2018년 19.1%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 제조업 내 고용 비중이 2%

를 초과하는 분야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컴퓨터 전자 및 공학기기’,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등으로 중화학공업이나 ICT 산업 아니면 기계장비산업과 같이 고부가가치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995~1999년 종사자 비중이 높았던 ‘음식료품(2.3%)’, ‘섬유 및 가죽제품(4.5%)’, ‘목재·종이·인쇄업(2.0%)’ 등의 비중은 각각 2015~2018년 1.6%, 1.5%, 0.9%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업이 재편되는 가운데, 경공업의 종사자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동 업종에 종사하던 고용 비중도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나. 생산 정체 및 고용 감소

주요국의 전산업 대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70년 12.9%에서 2009년 11.9%를 거쳐 2018년 11.5%로 하락하였다. 영국도 1970년 19.9%에서 2009년 11.0%를 거쳐 2018년 10.1%로 감소하였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전산업 대비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는 탈공업화현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자료: UN(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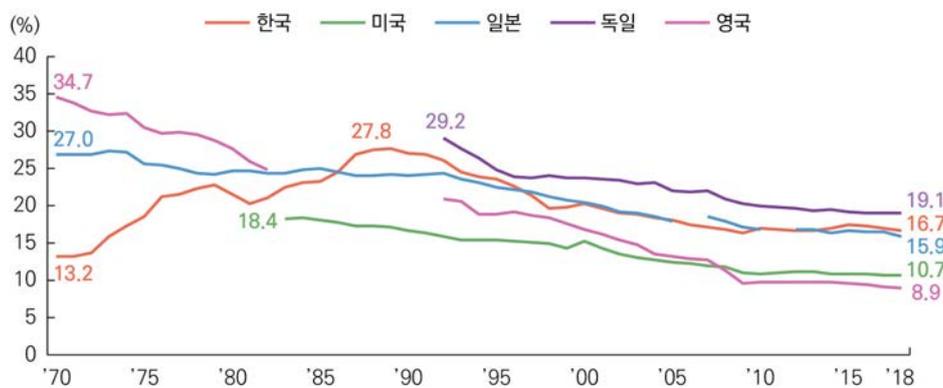
반면 독일의 전산업 대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 28.7%에서 1990년 통일 이후 2009년 19.1%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2018년 23.2%로 반등하여 생산부문에서

탈공업화가 지속되지 않았다. 일본도 전체 산업대비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 20.1%에서 2009년 18.3%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8년 21.2%로 반등하여 생산 부문에 있어서 탈공업화가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독일과 일본과 같이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은 미국 및 영국과 달리 생산 부문의 탈공업화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⁹⁾

한국의 전체 산업대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비중도 1970년 7.7%에서 2011년 29.6%를 거쳐 2016년 28.9%까지 하락하였다가 2018년 29.2%까지 반등하여 탈공업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생산 부문의 성장이 정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요국의 전체 산업 대비 제조업의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의 전체 산업 대비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80년 18.4%에서 2018년 10.7%로 하락하여 탈공업화가 생산 부문뿐만 아니라 고용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영국 제조업의 고용 비중도 1970년 34.7%에서 2018년 8.9%로 하락하여 탈공업화가 생산 부문뿐만 아니라 고용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5] 주요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 변화 추이



자료: UN(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9) 1970년대 영국경제의 산업공동화나 198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제조업 위축을 설명하는 것으로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들고 있는데, 이는 영국이나 미국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2차 산업의 비중이 왜 더 빠르게 하락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영국이나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한 이유는 첫째, 통화의 고평가로 1960년대 후반부터 파운드화가 상승하였고, 1980년 후반에 미 달러화의 상승은 가격경쟁력을 하락시켰다. 둘째는 임금상승이며 셋째는 일본과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의 질이 떨어져 경쟁력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남(이갑수,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론」, 2007, 111~112쪽)

독일의 제조업 고용 비중은 1990년 29.2%에서 2018년 19.1%로 하락하였고, 일본도 제조업 고용 비중이 1970년 27.0%에서 2018년 15.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미국, 영국과 달리 고용 부문에서만 탈공업화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대비 제조업의 고용 비중도 독일과 일본처럼 1970년 13.2%에서 1989년 27.8%를 거쳐 2018년 16.7%로 하락하여 고용 부문에서만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났다.

다. 낮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산업은 2000년대 초반 낮은 임금, 해외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분업구조에 맞게 탈공업화가 진행되었다.¹⁰⁾ 제조업의 경제적 비중 하락은 1차 산업(농림어업)에서 2차 산업(제조업)을 거쳐 3차 산업(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고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졌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초기에는 제조업 비중이 확대되지만,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국내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흥국으로 제조업이 이전된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제조업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으며 제조업이 여타 산업부문에 주는 파급효과가 약해지면서 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외적으로 독일은 제조업 및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¹¹⁾ 이러한 경험을 거치면서 주요국들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진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더 이상 견인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더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¹²⁾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제조파트너십 2.0(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2.0), 독일은 플랫폼 인터스트리4.0(Platform Industry 4.0), 일본은 신산업구조비전,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등의 이름으로 4차 산업

10) 전체 산업대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비중은 미국이 1970년 12.9%에서 2003년 12.0%로, 영국은 1970년 19.9%에서 2003년 12.5%로, 독일은 1970년 28.7%에서 2003년 21.0%로 일본은 1970년 19.8%에서 2003년 18.2%로 하락하고 있었음

11) 주현 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산업정책 연구」, 산업연구원, 2015, 88쪽.

12) 모든 정보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빅데이터가 수집되고,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로부터 도출한 최적행위를 로봇이 실행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뜻함

혁명에 대응한 산업구조전환을 추진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기술, 3D프린팅, 유전학, 생명공학기술과 같이 단절되었던 분야들이 경계를 넘어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기술혁신’과 ‘제조혁신’의 패러다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¹³⁾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는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3D 및 스마트자동차, 로봇 등의 제조업분야와 나노·소재 등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수준을 주요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분야가 주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3] ‘주요국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 비교’). 디지털 분야를 보면, 한국 인공지능의 수준은 2017년 기준으로 78.1로 미국(100)은 물론 EU(88.1), 일본(83.0), 중국(81.9)보다 낮고, 빅데이터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은 79.0을 기록하여 미국(100), EU(87.0), 일본(82.8), 중국(82.5)에 뒤처져있다. 사물인터넷(IoT) 부문에서도 한국은 82.0을 기록하여 미국(100), EU(90.0), 일본(87.0)보다 낮은 수준이며 중국(78.0)보다 다소 앞서는 수준이다. 가상·혼합현실 부문¹⁴⁾에 있어서도 한국은 80.0을 기록하여 미국(100), 일본(90.0), EU(87.0)보다 낮고 중국(80.0)과는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이은민,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통신정책, 2016.

14)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택에서 스포츠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가상·혼합현실 부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3] 주요국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 비교

분야	세부기술	선진국 대비 상대적 기술수준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디지털	빅데이터	100	87.0	82.8	82.5	79.0
	인공지능(AI)	100	88.1	83.0	81.9	78.1
	사물인터넷(IoT)	100	90.0	87.0	78.0	82.0
	가상·혼합현실	100	87.0	90.0	80.0	80.0
	지능형실감 방송·미디어 서비스	100	87.5	90.0	80.0	86.5
바이오	유전자 치료	100	94.5	85.0	78.5	82.5
	바이오 의약	100	90.8	88.1	70.4	77.4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	100	80.0	90.0	60.0	70.0
	질병진단 바이오칩	100	94.0	85.0	76.0	80.0
에너지	수소·연료전지	97.5	96.0	100	70.7	78.3
	고효율 태양전지	96.0	100	100	80.0	87.5
	스마트 그리드	100	95.0	85.0	80.0	80.0
제조 관련	유·무인 통합 자율비행체	100	96.0	81.0	87.5	70.0
	유·무인 자율비행체 통합 관제시스템	100	90.0	74.5	80.0	65.0
	스마트 자동차	100	100	92.0	70.0	80.0
	3D 프린팅 장비·소재	100	100	79.0	75.0	55.5
	3D 프린팅 소프트웨어·활용	100	99.0	82.5	75.0	75.0
	서비스 로봇	100	95.5	96.5	79.0	80.5
	초고속·초절전형 반도체 소자 및 SoC 설계·제작 기술	100	90.0	86.5	75.5	85.0
	웨어러블 디바이스	100	88.0	83.5	81.0	80.7
소재· 나노	나노융합	100	92.5	95.4	73.7	81.4
	다기능 융·복합소재	100	89.5	100	75.5	73.5

주: 1. 미국수준을 100으로 가정하였고, 수소연료전지와 고효율 태양에너지는 일본을 100으로 가정함.
 2. 산업연구원(2017), 「산업고도화 전략」에서의 분석 자료를 업그레이드함.
 자료: KISTEP(2018), 기술수준평가, 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7), 산업기술수준조사보고서; 정보통신산
 업진흥원(2017), ICT 기술수준 조사보고서

바이오분야를 보면,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은 미국(100), EU(90.8), 일본(88.1)에 크게 못 미치는 77.4이지만, 중국(70.4)보다 앞서는 수준이다. 유전자 치료기술도 미국(100), EU(94.5), 일본(85.0)이 앞서는 가운데, 한국은 82.5를 기록하여 중국수준(78.5)보다 높지만, 미국, EU, 일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술수준을 보면, 수소·연료전지 기술수준은 일본(100), 미국(97.5), EU(94.0)보다 낮은 수준인 78.3을 기록하여 중국수준(70.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스마트 그리드 수준도 미국(100), EU(95.0), 일본(85.0)보다 낮은 수준인 80.0으로 중국(80.0)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관련 분야에서 스마트 자동차 기술수준은 미국(100), EU(100), 일본(92.0)보다 낮은 수준인 80.0에 머물러 중국수준(70.0)보다 다소 높았다. 3D 프린팅 장비소재는 미국(100)과 EU(100)와 일본(79.0), 그리고 중국(75.0)보다도 뒤쳐진 55.5 수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소프트웨어·활용 측면에서도 미국(100), EU(99.0), 일본(82.5)에 못 미치는 중국(75.0) 수준인 75.0에 머무르고 있다.¹⁵⁾

서비스 로봇 수준은 미국(100), 일본(96.5), EU(95.5)에 못 미치는 수준인 80.0으로 중국(79.5)과 거의 같은 수준에 그쳤다.¹⁶⁾ 우리나라는 가격경쟁력과 신뢰성이 낮아 초기시장 형성이 지연되었고,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인해 양산에 필요한 경험과 실적 축적이 난항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견실한 전문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수준을 주요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낮은 기술수준이 신산업 창출이나 산업고도화를 저해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15) 디지털 제조는 3D 프린팅 기술 도입에 따른 맞춤형 소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저비용 기반의 대량생산·유통시대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가능한 시대로 전환하기 때문에 벤처중소기업과 같은 소규모 자본으로 생산이 가능한 공정의 혁신이 나타남(이은민,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통신정책, 2016)

16) 최근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로봇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제조 및 서비스 활동에 지능화된 시스템 적용이 확대되어 개별 맞춤형 제조서비스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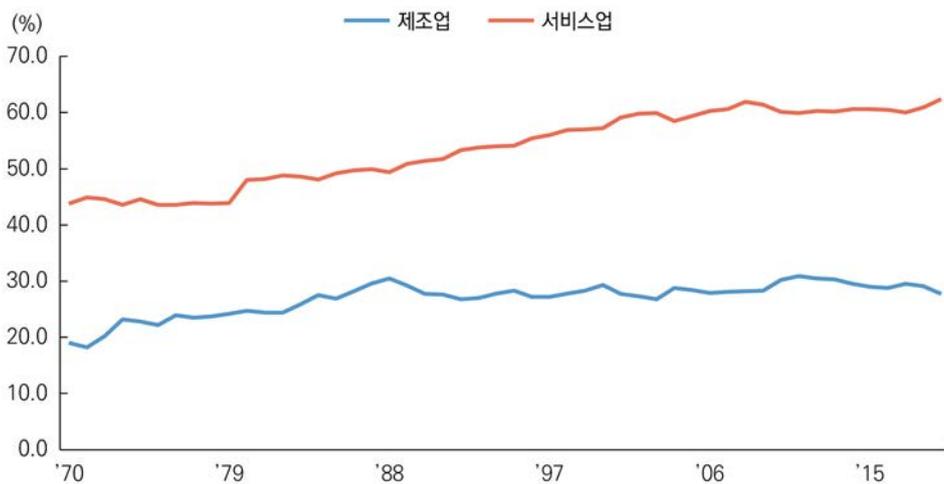
17) 산업연구원,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2017, 45쪽.

2. 서비스업의 성장 정체

가. 생산 및 고용 변화

서비스업은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과 달리 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비교역재로 여겨졌으나 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서비스 콘텐츠가 재화처럼 거래가 되는 등 교역 및 거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목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이 1970년 43.8%에서 2019년 62.4%로 18.6%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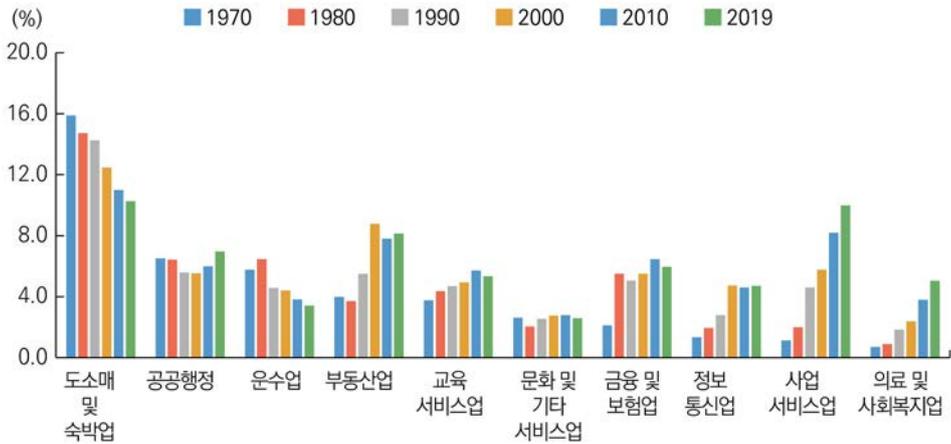
[그림 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명목 부가가치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의 명목 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 15.9%에서 2019년 10.3%로, 운수업은 동기간 5.8%에서 3.4%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사업 서비스업은 동기간 1.1%에서 10.0%로,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0.7%에서 5.0%로, 부동산업은 4.0%에서 8.1%로, 금융 및 보험업은 2.1%에서 6.0%로, 정보통신업은 1.3%에서 4.7%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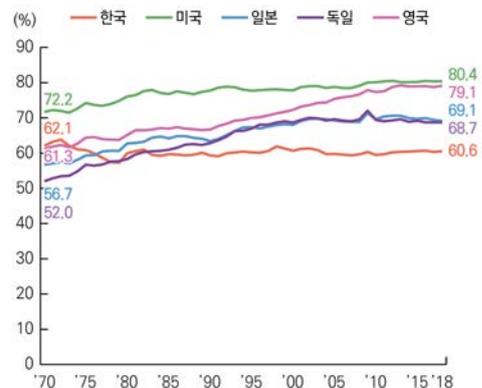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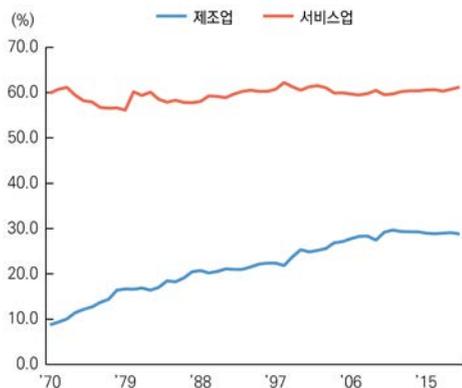
[그림 7] 서비스업의 업종별 명목 부가가치 비중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서비스업의 명목 부가가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실질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대 이후 60% 내외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실질증가율은 1970년대 9.8%에서 2010~2018년 동안 3.3%로 국내 총생산 실질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 72.2%에서 2018년 80.4%까지 상승하였다. 영국도 동기간 61.3%에서 79.1%로, 독일은 52.0%에서 68.7%로, 일본은 1970년 56.7%에서 2018년 69.1%로 상승하였다.

[그림 8]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그림 9] 주요국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업종별로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을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은 1970년대 18.3%에서 2010~2018년 2.4%로 16.0%p 하락하였으며, 사업서비스업은 동기간 18.0%에서 3.0%로 15.1%p, 정보통신업은 17.2%에서 4.4%로 12.9%p 감소하는 등 대부분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이에 반해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5.9%에서 6.7%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서비스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단위: %, %p)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8	차이
국내총생산	10.6	8.8	7.2	4.9	3.4	-7.1
제조업	18.2	10.9	9.0	6.5	4.1	-14.1
서비스업	9.8	9.3	5.8	2.6	3.3	-6.5
도소매 및 숙박음식	9.3	8.1	6.9	3.9	3.7	-5.5
운수	12.5	6.7	9.2	6.3	4.5	-8.0
금융 및 보험	18.3	16.3	8.8	3.9	2.4	-16.0
부동산	6.9	9.0	17.0	10.4	3.8	-3.1
정보통신	17.2	14.5	8.5	7.0	4.4	-12.9
사업서비스업	18.0	16.7	6.0	3.6	3.0	-15.1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6.4	5.9	3.8	3.9	1.7	-4.7
교육서비스업	5.9	6.0	6.6	4.7	6.7	0.8
의료, 보건, 사회복지	8.7	17.8	8.6	4.4	0.4	-8.3
문화 및 기타	8.9	10.4	10.5	6.7	5.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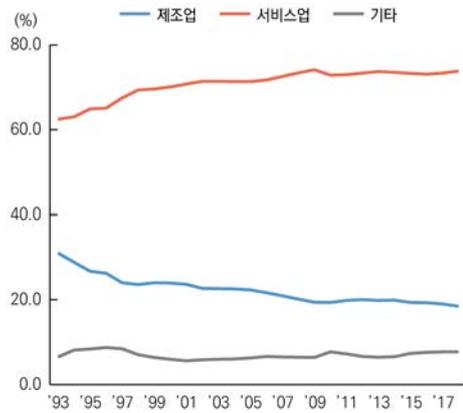
주. 실질GDP 기준 연중 성장률을 기간별 기하평균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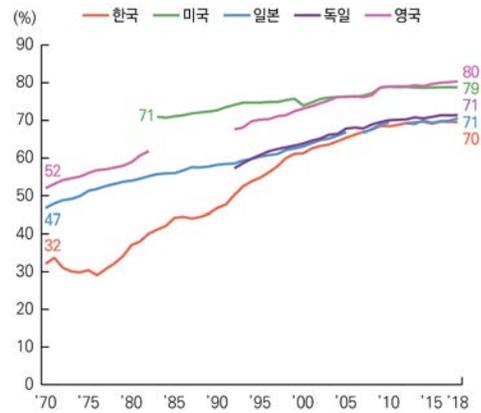
한편 서비스업 고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¹⁸⁾에 따르면, 전산업 종사자수는 1993년 1,225만명에서 2018년 2,223만명으로 81.6%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종사자수는 동기간 759만명(전체 대비 62.0%)에서 1,642만명(73.8%)으로 116.3% 증가하였다.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197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독일, 일본과 유사한 약 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18) 전국사업체조사의 전신인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980년대부터 조사되었으나 1993년부터 전국 사업체 모집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음

[그림 10] 업종별 고용 비중 추이



[그림 11] 주요국 서비스업 고용 비중 추이



주: 종업원수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세부 업종별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이 1995~1999년 28.5%에서 2015~2018년 25.0%로, 운수업이 5.5%에서 5.2%로, 금융 및 보험업이 5.3%에서 3.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의 종사자 감소는 주로 도소매업(19.6 → 14.6%)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유통산업의 발달과 대형소매점의 급성장에 기인한다.¹⁹⁾ 반면, 숙박 및 음식업은 1993년 8.5%에서 2018년 10.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업(0.8 → 2.7%), 사업서비스업(4.0 → 5.4%), 교육(6.1 → 7.4%),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업(3.0 → 8.0%), 문화 및 기타(7.2 → 10.7%)의 고용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19) 통계청, 「한국의 서비스산업」, 2008, 47쪽.

[표 5] 서비스업 고용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 %)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8	
	증감률	비중								
전산업	0.5	100	2.8	100	2.6	100	3.4	100	2.8	100
제조업	-3.0	25.5	1.5	23.6	-0.9	20.7	4.1	19.9	0.8	19.1
서비스업	2.6	66.9	3.3	70.8	3.4	72.9	3.2	73.2	3.0	73.4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2.2	28.5	1.9	29.2	0.9	26.7	3.0	25.2	2.4	25.0
운수업	3.3	5.5	3.1	5.8	2.6	5.7	1.5	5.4	2.2	5.2
금융 및 보험업	-0.5	5.3	-1.2	4.3	3.5	4.0	0.4	3.8	0.2	3.4
부동산업	4.4	2.3	5.5	2.6	0.0	2.5	1.6	2.3	4.0	2.3
정보통신업	8.0	0.8	0.9	1.0	40.6	2.3	4.1	2.6	3.2	2.7
사업서비스업	6.4	4.0	13.0	5.7	-2.8	4.8	6.6	4.9	3.8	5.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8	4.3	-1.1	3.6	4.8	3.6	-0.3	3.5	3.1	3.3
교육	4.1	6.1	5.2	7.2	4.1	8.1	2.1	7.9	1.9	7.4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6.0	3.0	6.8	3.7	10.4	5.1	8.4	6.8	6.7	8.0
문화 및 기타	1.0	7.2	3.6	7.7	10.1	10.2	3.2	10.8	2.9	10.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나.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낮은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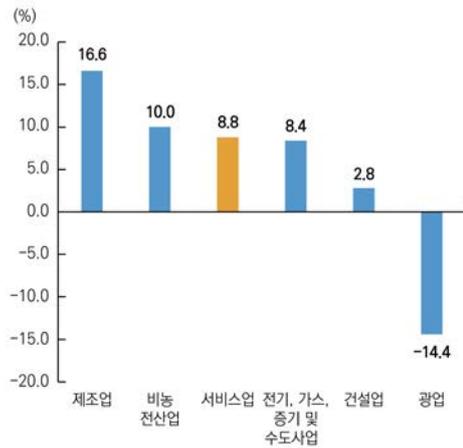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이 60%대에서 정체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1970년 32%에서 2018년 70%까지 상승하면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2015년 대비 2019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은 8.8%로 제조업 16.6%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편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업종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의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은 20.9%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을 상회한다. 이는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증가보다는 고용 감소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15~2018년 종사자수는 135만명이고 이 중 서비스업이 115만명(85.2%) 증가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은 3.5만명(2.6%)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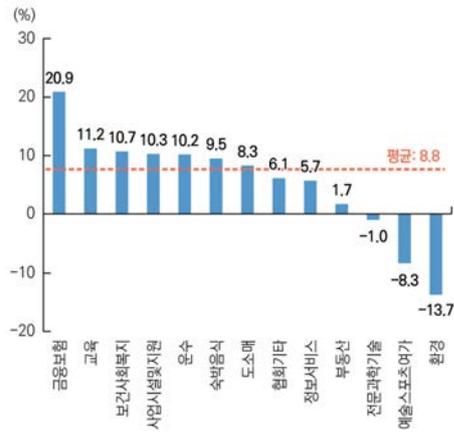
서비스업 중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이 8.3%로 평균 증가율(8.8%)을 하회하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업체 간

경쟁이 심한 가운데 신규 종사자 수가 11.5만명(8.5%)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업(33.8만 명, 25.1%)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및 비영리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2019년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이 2015년 대비 10.7%로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고용의 증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업종별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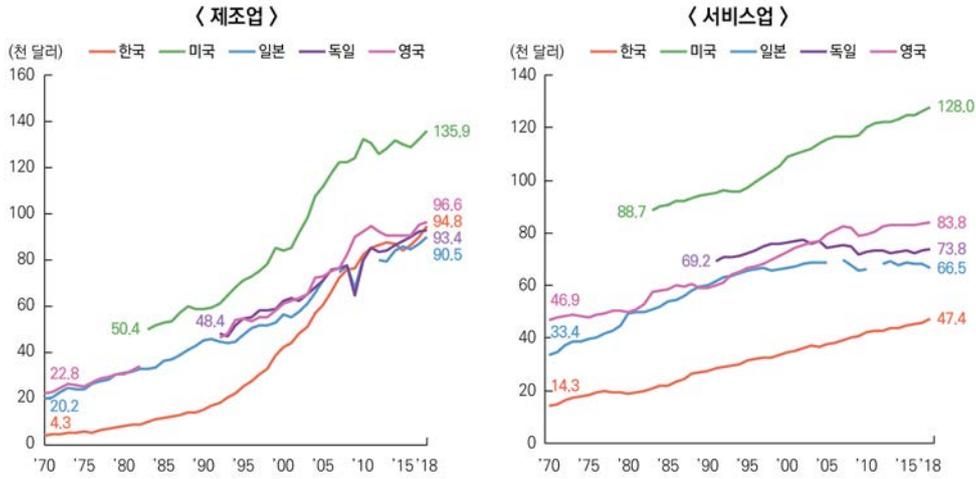
[그림 13] 서비스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주: 1. 노동생산성지수 = 실질부가가치지수 / 노동투입량지수 × 100
 2. 2015년 대비 2019년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을 의미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주요국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기술혁신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축소되어 온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94.8천 달러로 일본(90.5천 달러), 독일(93.4천 달러), 영국(96.6천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47.4천 달러로, 영국(83.8천 달러), 독일(73.8천 달러), 일본(66.5천 달러)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4] 주요국간 산업별 노동생산성 수준 비교



자료: UN(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및 ILO

문제는 이런 추세가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기술장벽이 높아지면서 저숙련 근로자들이 소규모 창업의 형태로 노동집약적 서비스 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2017년 기준 568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25.4%)으로 OECD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부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부진한 이유로 투자 부진을 들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성장회계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 감소폭이 다른 요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1인당 경제성장률은 1991~2000년 6.2%에서 2001~2010년 4.0%로 2.2%p 하락하였는데, 이 중 총요소생산성²⁰⁾은 동기간 0.4%p(0.7 → 1.1%) 증가한 반면, 인구 대비 취업자 증가율이 0.9%p(2.1 → 1.2%), 물적자본은 1.6%p(3.4 → 1.8%) 하락하였다. 2011~2018년 서비스업 1인당 경제성장률도 2.7%로 2001~2010년 4.0%에 비해 1.3%p 하락하였다. 이 중 인구대비 취업자 증가율이 동기간 0.4%p(1.2 → 0.8%), 총요소생산성이 0.3%p(1.1 → 0.8%) 하락한 반면, 물적자본은

20)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기술, 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변화 등 생산요소를 제외한 경제전체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의미함.

0.7%p (1.8 → 1.1%)로 하락폭이 컸다.

[표 6] 서비스업의 1인당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단위: %, %p)

기간	GDP 성장률 (1+2)	취업자/ 인구 (1)	취업자 1인당 실질부가가치 (2=3+4)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 (3)	총요소생산성 (4)
1971~1980	6.9	2.0	4.9	4.8	0.2
1981~1990	8.1	2.5	5.6	3.4	2.2
1991~2000	6.2	2.1	4.1	3.4	0.7
2001~2010	4.0	1.2	2.8	1.8	1.1
2011~2018	2.7	0.8	1.8	1.1	0.8

자료: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

이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의 물적자본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전반적으로 투자 여력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물적자본의 증가로 해당 업종의 노동생산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 통신 및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IT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ICT 생산자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9.0%로, 서비스업 평균(2.5%)를 크게 상회하였다. 특히 통신 분야의 경우 동기간 14.2%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표 7] 서비스업 특성별 노동생산성

(단위: %, %p)

	2001~2015	2001~2007 (A)	2011~2015 (B)	증 감 (B-A)
서비스업	2.0	2.5	2.3	-0.2
유통	3.3	3.8	2.8	-1.0
개인	1.8	0.9	1.4	0.5
ICT생산자	5.6	9.0	3.1	-5.9
비ICT생산자	1.7	1.8	2.2	0.4
공공	0.3	1.1	2.0	0.9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생산성계정」(2017)

[표 8] ICT생산자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단위: %, %p)

	2001~2015		증 감 (B-A)
	2001~2007 (A)	2011~2015 (B)	
ICT생산자	5.6	9.0	-5.9
출판·영상·방송	2.6	3.8	-2.4
통신	9.9	14.2	-6.0
IT·정보서비스	1.4	4.7	-6.8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생산성계정」(2017)

문제는 서비스업의 투자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업종별 설비투자 추이²¹⁾를 살펴보면, 설비투자가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전기전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설비투자 규모는 2014년 84.9조원에서 2019년 91.5조원으로 7.8%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비제조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비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14년 94.1조원에서 2019년 73.8조원으로 21.6% 감소하였다. 이 중 서비스업은 2014년 56.4조원에서 2019년 43.4조원으로 23.1%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이 동기간 18.6조원에서 11.8조원으로 36.6% 감소하였고 출판·영상방송·통신업이 10.2조원에서 8.7조원으로 14.8%, 도매·소매업은 10.0조원에서 7.1조원 29.0% 감소하였다.

21) KDB산업은행, “2020년 설비투자 전망.” 「산은조사월보」, KDB산업은행, 2020, 29쪽.

[표 9] 업종별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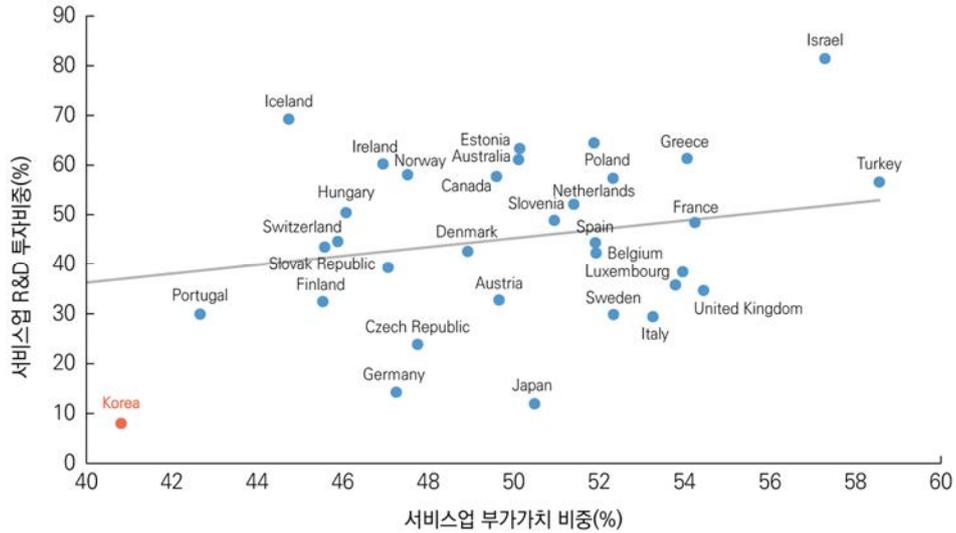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비중
전체	179.0	180.8	180.9	189.8	167.7	165.3	100.0
제조업	84.9	85.7	87.8	106.0	94.2	91.5	55.4
전기전자	38.2	41.1	46.2	61.7	54.1	54.2	32.8
비제조업	94.1	95.1	93.1	83.8	73.6	73.8	44.6
서비스업	56.4	54.7	58.5	51.8	44.8	43.4	26.3
부동산·임대업	18.6	17.3	22.0	15.2	11.7	11.8	7.1
출판·영상방송·통신	10.2	8.8	10.1	9.1	9.2	8.7	5.3
도매·소매업	10.0	7.1	7.2	7.6	7.7	7.1	4.3
운수업	9.9	14.3	13.5	12.9	11.0	11.1	6.7
전기·가스·수도업	24.1	23.5	19.5	19.7	17.4	19.7	11.9
건설업	13.4	16.8	14.9	12.2	11.2	10.6	6.4

자료: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한편, 우리나라는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업의 R&D 투자도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는 국가와 비교해도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서비스업 R&D 비중은 8%(2015년 기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는 독일(14%, 2015년), 일본(12%, 2018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포르투갈의 서비스업 R&D 비중이 약 30%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R&D 투자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주요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및 R&D 투자 비중



주: OECD 23개국(국가별로 사용된 년도는 2013년에서 2018년까지로 상이함)
 자료: OECD STAN database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경쟁 제한적 규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저조한 이유로 경쟁 제한적 규제를 들 수 있다. 규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행정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적정수준 보다 많아지면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²²⁾

이에 정부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규제수준은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다. IMD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규제는 조사대상 63개국 중 50위로 전년(47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 규제 부담 순위도 79위로 인도(16위), 중국(18위), 인도네시아(26위), 일본(32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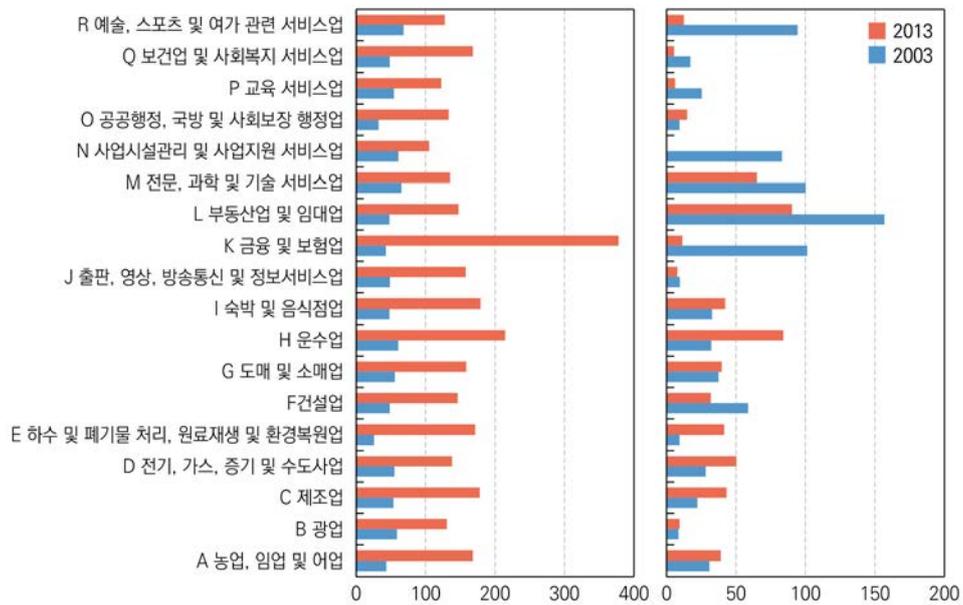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 규제정도를 산업별 규제지수²³⁾로 살펴보면, 일부 서비스업에서 유량

22) 한성훈·임시영(“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총요소생산성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조사월보」, 2008.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 평균으로 규제가 10% 완화되면 총요소생산성이 0.3%p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23) 박정수 외, 「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산업연구원, 2014.

규제지수²⁴⁾는 2003년에 비해 2013년에 감소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저량규제지수²⁵⁾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의 저량규제지수는 2013년 기준 200 미만이지만 금융보험업만 400에 이를 만큼 서비스업의 규제가 기타 산업에 비해 높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2013년 유량규제 지수는 2003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그림 16] 표준산업분류별 저량 및 유량 규제지수



자료: 박정수 외(2014)

과도한 규제는 적절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반면 신규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²⁶⁾에서 네거티브²⁷⁾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일부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

24) 유량규제지수는 일정 기간(1년 단위)의 규제의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규제 수준의 변화 속도를 나타냄

25) 저량규제지수는 연도별 유량규제지수를 누적인 값으로 특정 산업의 규제정도의 수준을 의미

26)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함.

27)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금지사항을 열거함

작하였다.²⁸⁾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은 크게 입법방식의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로 구분된다. 규제 샌드박스²⁹⁾는 신사업을 신속하게 시도 및 추진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림 1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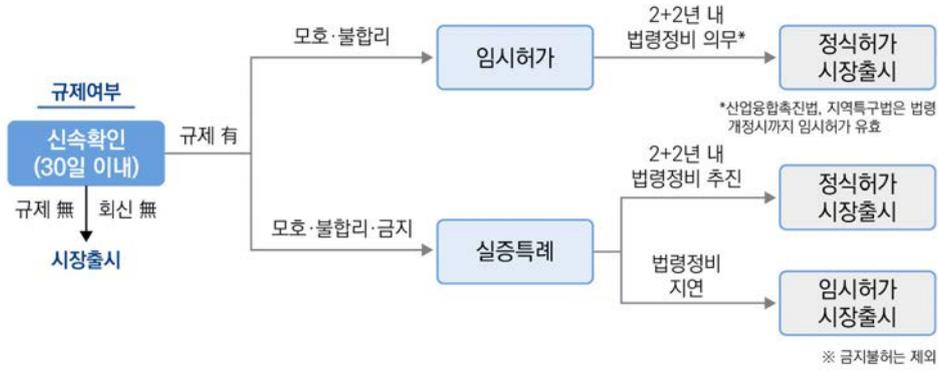
자료: 규제개혁위원회(2019)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신속확인’과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로 구분된다.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이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문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3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는 제도이다. 만약 30일 이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업은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임시허가’는 안정성이 검증되었으나 관련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제도이다. ‘실증특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모두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 이내로 특례를 받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다.

28) 규제개혁위원회, 「2018 규제개혁백서」, 2019, 58-72쪽.

29)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2015년 11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이노베이크(Project Innovate)를 계획하면서 도입됨.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제품 개발에서 도입까지 기간을 앞당김으로써 비용이 감소하고 핀테크 기업가치가 증가하며 금융상품의 시장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림 18] 규제 샌드박스 개념도



자료: 규제개혁위원회(2019)

이와 같이 사전허용, 사후규제를 의미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되면서 규제 등록건수가 2013년 15,269건에서 2019년 13,992건으로 감소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도 2019년 195건으로, 이 중 시장진출이 가시화된 사례는 58건에 이른다. 다만, 이러한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³⁰⁾ 규제 샌드박스 종료 후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자와 충돌의 예로 카카오T 카풀서비스나 타다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카카오T는 2018년 2월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고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행하였으나 택시업계와 대립으로 법적근거³¹⁾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였다. 타다의 경우에도 택시업계와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영업의 근거가 되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³²⁾ 이 두 사례를 통해 신사업의 시장진입이 단순히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대타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책임감 있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30) 황민규, “규제 샌드박스’ 왜 규제에 막혔나...“산업현장과 괴리된 규제완화 실효성 ↓,” 조선비즈, 2019.12.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2/2019120202329.html, 접속: 2020.5.18.>

31)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에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32)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기사포함 렌터카’ 사업이 중단됨. 법이 개정되면서 타다의 영업 근거였던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효력을 잃고 대신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로 11인승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제한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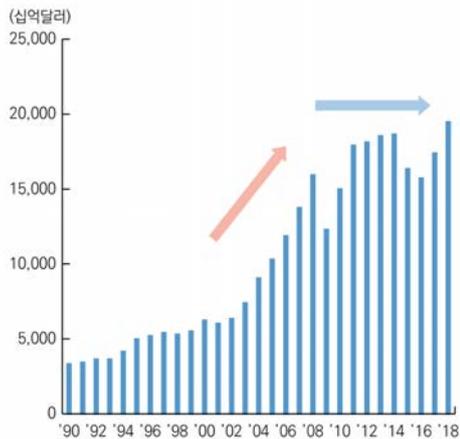
3. 대외 경제여건 악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증가율이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무역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이는 경기적 요인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³³⁾. 본 절에서는 최근 세계 및 우리나라 대외무역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경제여건 악화 요인을 보호무역 기조 확산, 중국 경제구조 고도화, 신흥국 경제 성장 및 수직적 분업구조 약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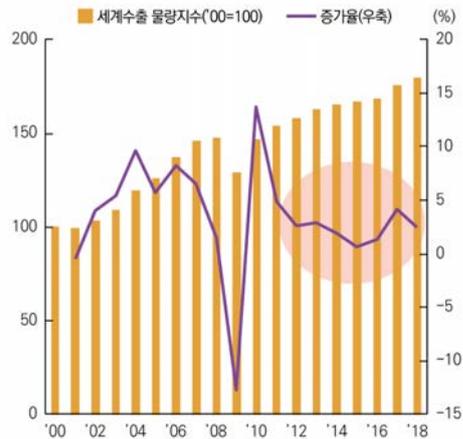
가.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

글로벌 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02~2007년 세계 무역규모(금액 기준)는 연평균 14.6%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2~2018년에는 금융위기 이전수준의 1/10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물량기준 세계수출 증가율도 2002~2007년 연평균 증가율은 6.6%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12~2018년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2.3%로 하락하였다.

[그림 19] 세계 무역규모(금액) 추이



[그림 20] 세계 수출 물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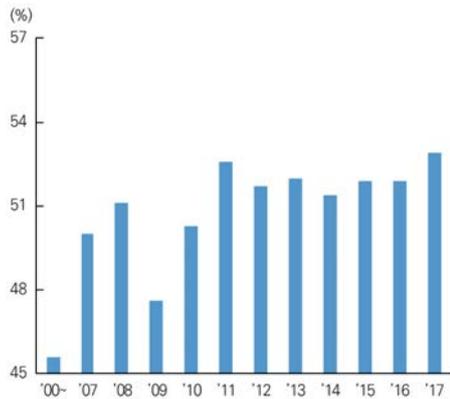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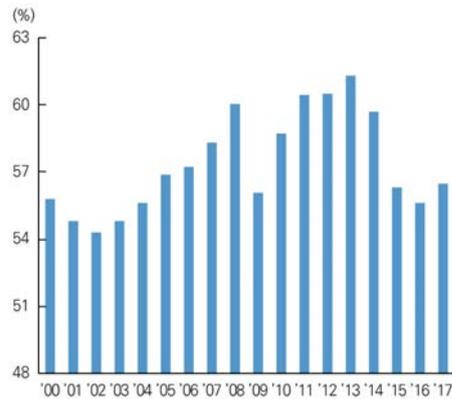
33) 최낙균 외,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제17권 제5호, 2017.

글로벌 무역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글로벌 분업구조 참여도도 금융위기 이후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국가들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참여율은 2000년대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2% 수준에서 정체양상을 시현하고 있다. 이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고도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 해외 생산기지 확보 유인 감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차 산업 혁명,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도 해외 생산기지 확대의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글로벌 분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 중간재 교역 비중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율



[그림 22] 세계 중간재 교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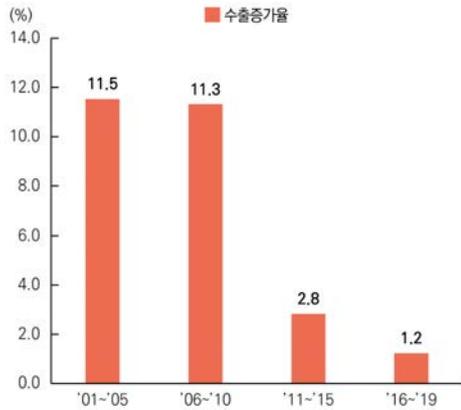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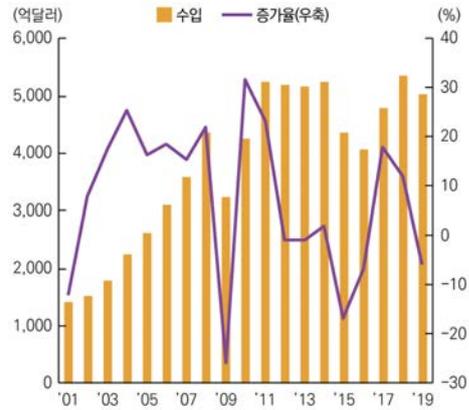
글로벌 교역규모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2000~2010년 연평균 11%를 상회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2019년 연평균 2.1%로 하락하였다. 또한 2016~2019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2%로 낮아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입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며 2000~2007년 연평균 15.4%에서 금융위기 이후 2009~2019년 연평균 2.7%로 하락하였다. 특히 2019년 우리나라 수입은 2016년 이후 3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며 전년대비 -6.0%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23] 기간별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그림 24] 우리나라 수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나. 보호무역 기조 확산

(1) 자유무역기조 약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무역불균형 해소,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문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내세우며 공세적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WTO 체제 내에서 불공정 무역에 대처해 오던 접근법에서 벗어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다자체제 보다는 양자체제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1월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³⁴⁾를 발동해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2018년 7월, 8월, 9월, 2019년 9월 미국 통상법 301조³⁵⁾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9년 5월에는 수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한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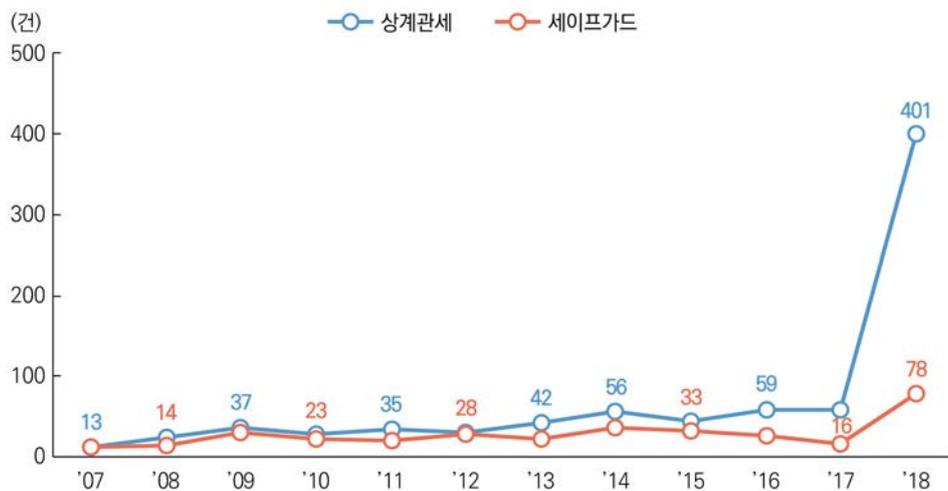
34) 대통령이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고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

35)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1974년에 제정한 미국 종합무역법안으로, 이 법안에서는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법은 단일통상법 체계가 아니라 대외통상과 관련된 일련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통상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309조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

EU, 중국, 터키,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주요국들이 이에 대응해 수입규제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수입규제인 상계관세 조치 및 세이프 가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계관세³⁶⁾ 조사 및 발동 건수는 2017년 59건에서 2018년 401건으로 약 5.8배 증가하였다. 또한 세이프가드³⁷⁾도 동기간 16건에서 78건으로 3.9배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25] 연도별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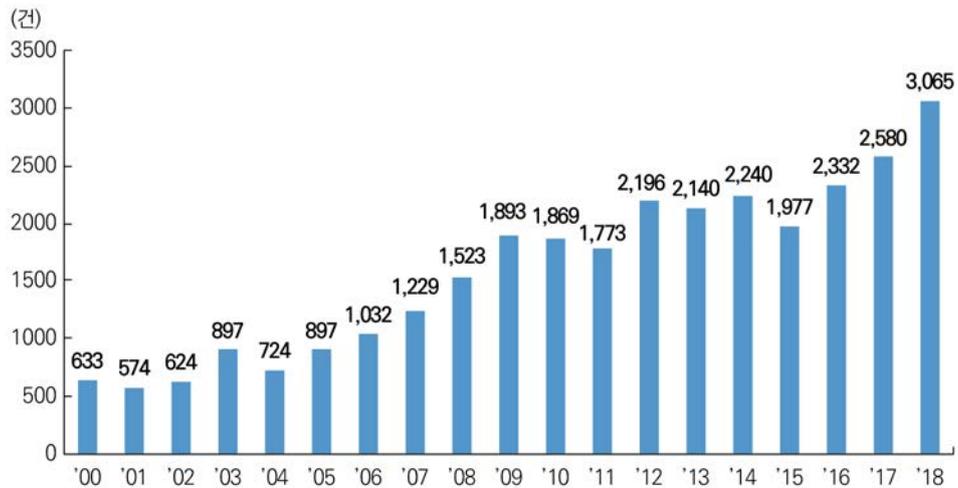
주: 개시 및 발효건수 합산기준
 자료: WTO

최근 특정 국가 및 기업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차별적 조치인 비관세장벽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³⁸⁾은 2011년 1,773건에서 2018년 3,065건으로 72.9% 증가하였다. 중국은 기술규제와 표준정책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36) 수출국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아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37)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38) 무역국간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하고 적용함으로써 교역의 자유성을 낮추는 요인을 의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정책적 요인과 연계되어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³⁹⁾

[그림 26] 연도별 기술무역장벽(TBT) 통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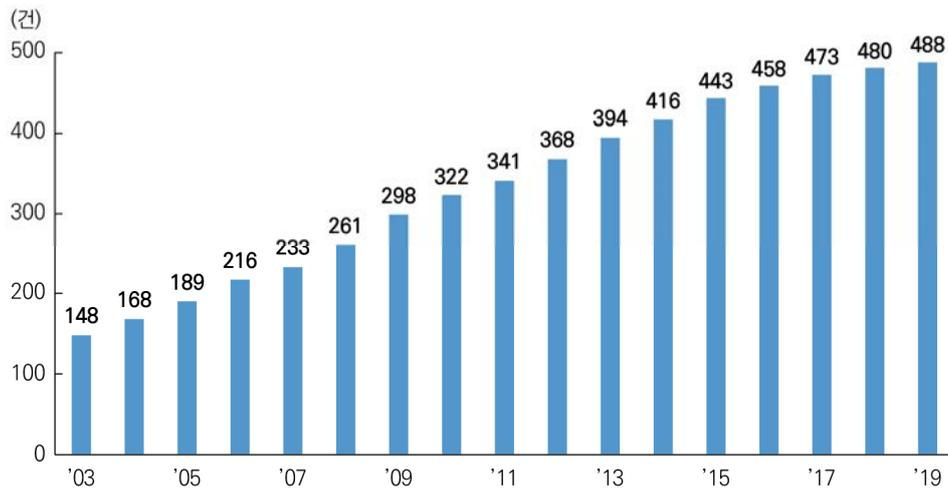
주: 전체통보문 기준
자료: WTO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수입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수입 물품 구매를 감소시키고 일부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해 낮은 품질과 높은 가격으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축시키고 연구개발 지출의 감소 등을 초래하여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가간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대한 특화가 어려워져 효율성이 감소하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역 당사국의 소비와 투자, 교역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9) 민혁기 외, 「국제 무역·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2020.

(2) 역내무역 및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확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보호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2003년 148건에서 2007년 233건으로 85건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며 2019년 기준으로 총 488건이 발효되었다. 주요국들은 CPTPP⁴⁰⁾와 RCEP⁴¹⁾ 등 메가 FTA와 일본-EU, 베트남-EU 등 양자무역협정을 통해 역내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7] 지역무역협정(RTA) 추이



자료: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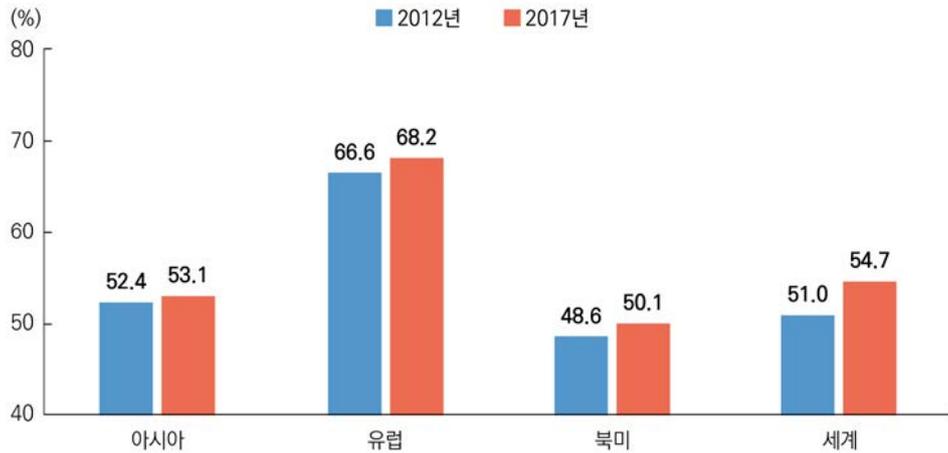
지역무역협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내무역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무역액 중 역내무역 비중은 2012년 51.0%에서 2017년 기준 54.7%로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유럽, 북미, 아시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내 무역 비중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권의 역내 교역 비중은 2011년 52.4%에서 2017년 53.1%로 0.6%p 증가하였으며 북미권 역내 교역 비중은 2011년 48.6%에서 2017년

40)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에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4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50.1%로 1.5%p 증가하였다. 또한 유럽권의 역내 교역 비중은 2011년 66.6%에서 2017년 68.2%로 1.6%p 증가하였다.⁴²⁾

[그림 28] 역내무역 비중 변화



자료: 무역연구원

다. 중국 경제구조의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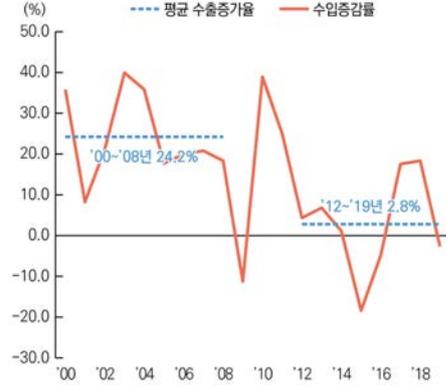
중국의 정책 기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조립 및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이 축소되고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8년 연평균 25.0%를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12~2019년 연평균 3.6%로 둔화되었다. 특히 2015~2019년 중국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5%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수입 증가율도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00~2008년 연평균 24.2%에서 2012~2019년 2.8%로 하락하였다. 중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31.1%에서 2018년 18.5%로 12.6%p 하락세를 보였다.

42) 정희철 외,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국제무역연구원, 2020.

[그림 29] 중국 수출 증가율



[그림 30] 중국 수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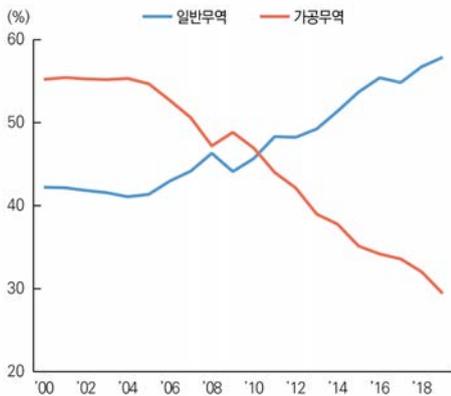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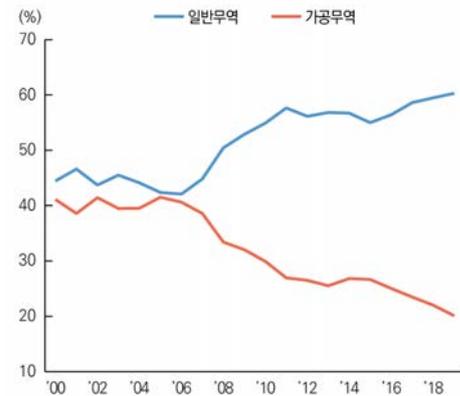
중국경제의 고도화와 함께 중국의 가공무역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2000~2008년 수출의 53.5%, 수입의 39.4%를 점유하였으나 2019년 수출의 29.4%, 수입의 20.1%로 낮아졌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하락은 중간재 자급률 및 중간재 수입에 영향을 미치며 품목별 수입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0년 32.7%, 2005년 34.2%에서 2016~2018년 연평균 42.9%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주력 품목인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31] 중국 가공무역 비중_수출



[그림 32] 중국 가공무역 비중_수입



자료: CEIC

또한 최근 중국 무역의 기술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종재 기준으로 보면 노동집약형 제품은 감소 추세를 보는 반면 통신기기,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00년 의류, 신발, 가방 등이 중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6개 품목을 점유하였으나 2019년 통신기기, 전자 및 자동차 부품, 컴퓨터 등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표 10] 중국의 10대 수출 품목 변화

(단위: %)

구분	2019	비중	2000년	비중
1위	통신기기	9.0	자동정보처리 기기	4.4
2위	자동정보처리 기기	5.9	기계부품 및 악세서리	2.3
3위	전자 집적 회로	4.1	세발자전거, 스쿠터 및 바퀴완구	2.0
4위	석유와 역청유	1.5	여성의류	1.8
5위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1.4	스웨터, 가디건, 풀오버 등 의류	1.8
6위	자동차부품	1.3	신발	1.7
7위	조명기기	1.3	남성 의류	1.7
8위	기계부품 및 악세서리	1.3	트렁크, 물건 케이스 및 가방	1.5
9위	세발자전거, 스쿠터 및 바퀴완구	1.3	전기변압기, 인덕터 등	1.4
10위	모니터와 프로젝터	1.2	기타 신발	1.4

자료: 무역협회

중국산 수출품의 경쟁력 분석결과 고기술 제품군의 경쟁력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휴대폰 등 통신장비의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 -0.13에서 2019년 0.68로 상승하였으며, 자동정보처리 기기도 동기간 0.42에서 0.66로 상승하였다. 중국 수출품목의 기술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글로벌 기술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한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글로벌 기술기업 및 해외 자본 유치를 활용하여 자국 기술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라. 신흥국 경제의 부상과 수직적 분업구조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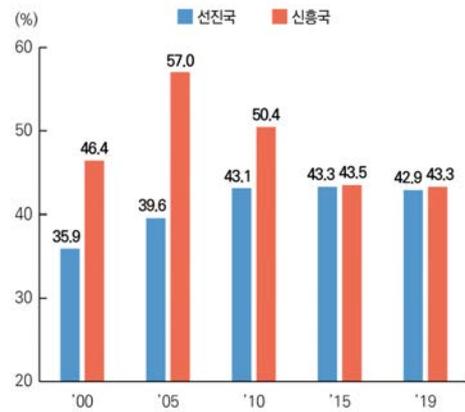
(1) 신흥국 경제 부상

신흥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세계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0.9%에서 2018년 39.7%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수입액 중 신흥국의 비중도 2000년 28.0%에서 2018년 42.4%로 높아졌다. 신흥국의 GDP 대비 교역 비중은 2005년 57.0%에서 2019년 43.3%로 하락하며 2019년 42.9% 기록한 선진국의 교역 비중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33] 신흥국의 GDP 및 세계교역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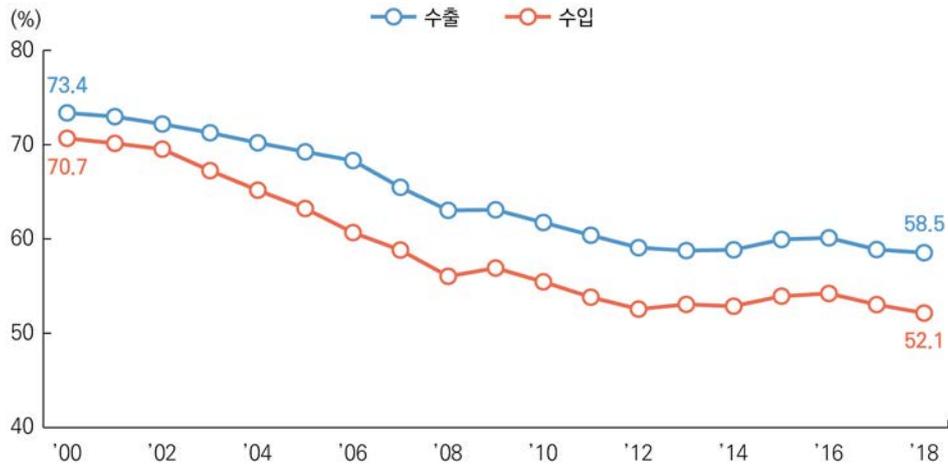
[그림 34] GDP대비 교역 비중



자료: IMF

신흥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의존도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신흥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2000년 73.4%에서 2018년 58.5%로 14.8%p 하락하였다. 수입측면에서도 신흥국의 선진국 의존도는 2000년 70.7%에서 2018년 52.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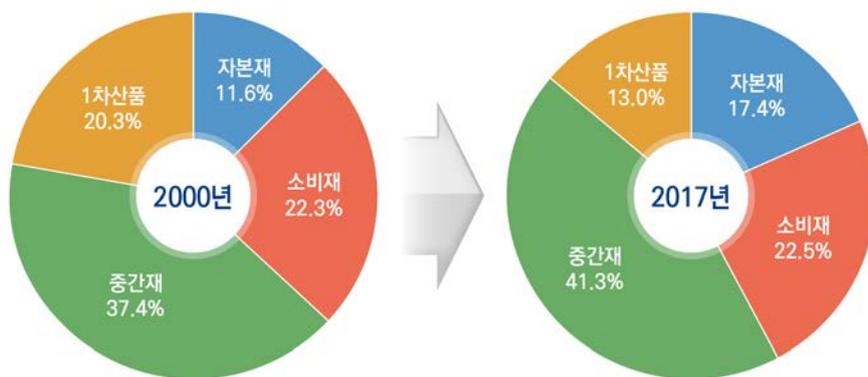
[그림 35] 신흥국의 대선진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자료: IMF

또한 1차 상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신흥국의 수출 중 1차 상품 비중은 2000년 20.3%에서 2017년 13.0%로 감소한 반면 자본재 비중은 2000년 11.6%에서 2017년 17.4%로 상승하였다. 중간재 비중은 동기간 37.4%에서 41.3%로 상승하였다. 이는 신흥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수출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6] 신흥국 수출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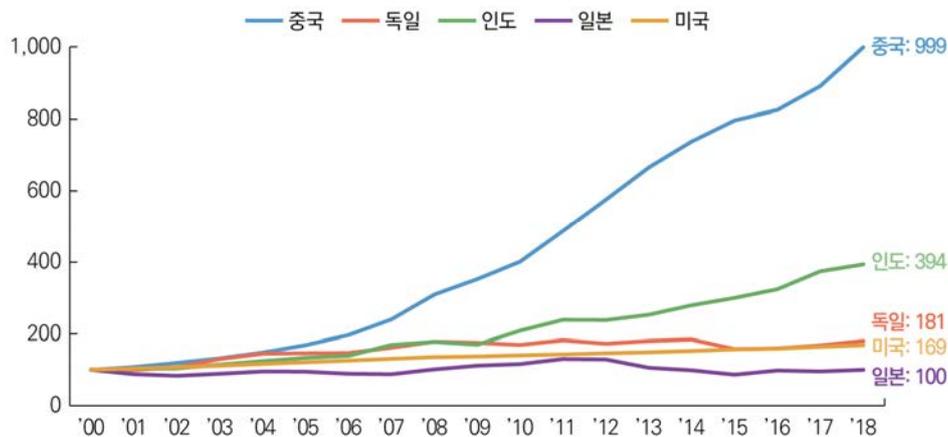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선진국과 신흥국간 수직적 분업구조 변화

글로벌 분업구조는 선진국이 신흥국에 자본재와 중간재를 공급하고 신흥국은 최종재로 조립·가공하여 선진국에 수출하는 수직적인 분업구조 양상을 지속해왔다.⁴³⁾ 기술력과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은 신흥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신흥국에 자본재와 중간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중국 등 신흥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수행하며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가공 등 단순 제조업에 특화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신흥국의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신흥국의 선진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축소되는 가운데 선진국-신흥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발전으로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 간 생산비용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기존 신흥국에서 이동시킬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중국, 인도 등의 시간당 임금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시간당 노동비용은 2000년 대비 중국은 9배, 인도는 2.9배 상승한 반면 미국 0.7배, 독일 0.8배 상승하였으며 일본은 2000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2018년 연평균 노동비용은 중국의 경우 연평균 13.6%, 인도는 7.9% 상승하였으며, 독일은 연평균 3.4%, 미국은 3.0% 상승하였다.

[그림 37] 주요국 단위 시간당 노동 비용 변화



주: 달러기준 시간당 임금으로 2000년을 100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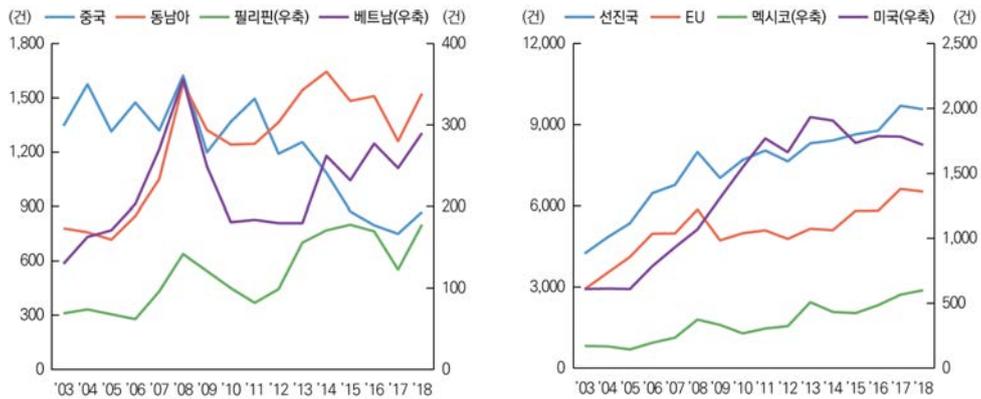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신흥국의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 등에 따라 수직적 분업구조에 집중되었던 글로벌

43) 정희철 외,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국제무역연구원, 2020.

별 분업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생산공장 이전이 생산비용, 시장접근성, 정책적 요인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의 생산공장 해외이전에 대한 결정이 사업성격 등에 따라 비용이 저렴한 지역, 시장접근성을 위한 소비시장 역내, 본국으로 회귀(리쇼어링)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그림 38] 생산비용 중시 그린필드 FDI [그림 39] 시장접근성 중시 그린필드 FDI



자료: UNCTAD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최근 대중국 그린필드 투자⁴⁴⁾는 2011년 1,496건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871건으로 감소한 반면 동남아 국가에 대한 투자는 2011년 1,246건에서 2018년 1,523건으로 늘어났다. 베트남의 경우 2011년 184건에서 2018년 290건으로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등에서 생산비용이 더 저렴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931건에서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1년 1,76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2018년 1,700건 이상의 그린필드 투자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2011년 5,089건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6,526건을 기록하였다. 멕시코도 2011년 305건에서 2018년 600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주변부를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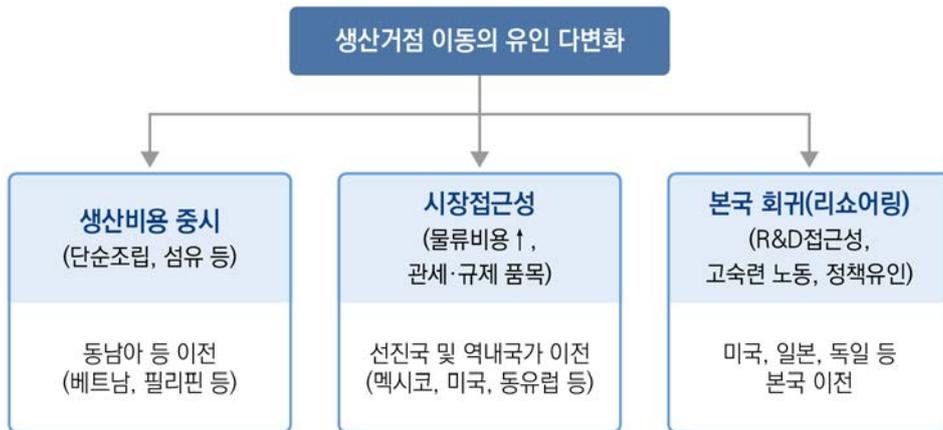
한편 선진국의 경우 본국으로 생산기반을 회귀(Reshoring)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 선진국 제조업체들이 해외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하거나, 자국 내 생

44) 국외자본이 투자할 때 용지를 직접 매입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투자를 받는 국가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

산기반을 확충하는 투자를 늘리는 중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리쇼어링 기업수는 2010년 95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67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⁴⁵⁾.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 성장률 둔화 등을 고려시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리쇼어링을 포함한 생산거점의 변화를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그림 40] 수직적 분업구조 변화 유인



자료: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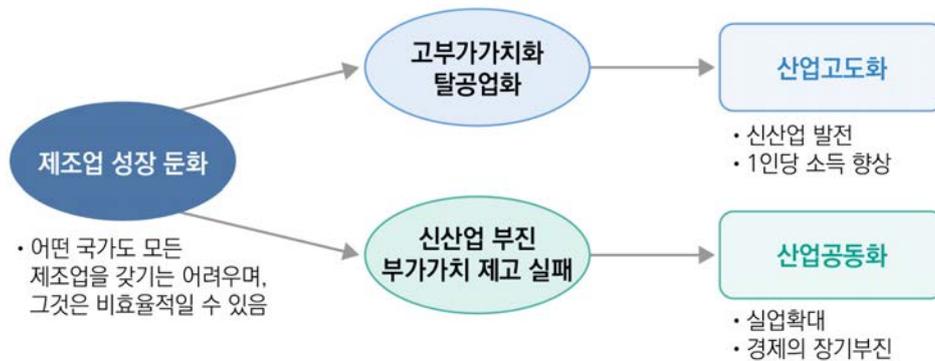
45) 정희철 외,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러다임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국제무역연구원, 2020.

Ⅲ. 산업구조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공동화

최근 한국의 산업구조는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와 함께 2011년 이후 전산업 대비 제조업의 실질GDP 비중이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나타나는 제조업의 정체 양상에 대해 부정적 의미의 탈공업화인 산업공동화 가능성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고도로 가는 자연스러운 탈공업화 현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⁴⁶⁾ 산업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이 하락하여 타격을 받은 산업 혹은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해지고,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아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⁴⁷⁾

[그림 41] 공동화의 정의



자료: 이지평, “산업공동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LG주간경제」, 2003, 6쪽.

고바야시 히데오 교수(2003)는 일본에서 산업공동화를 공론화할 때 산업공동화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산업의 활력과 산업연관효과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⁴⁸⁾ 이에 이부형(2016)은 산업공동

46) 이부형,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6.

47)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夫), 「産業空洞化の克服—産業転換期の日本とアジア」, 中公新書, 2003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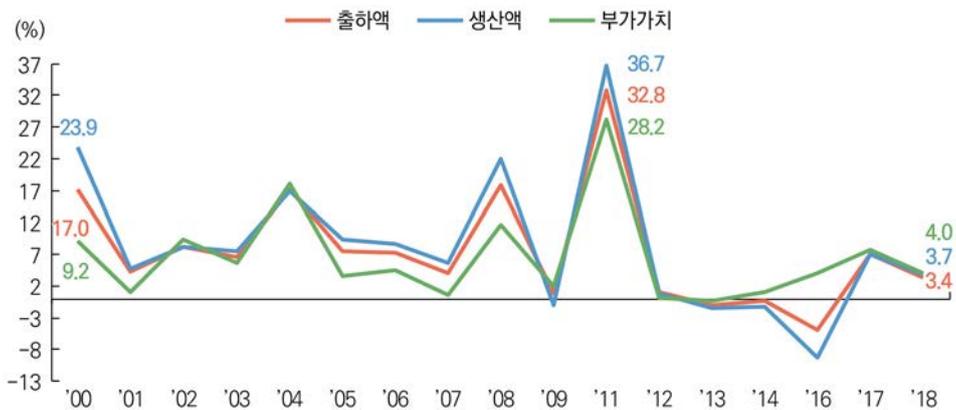
48)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夫), 「産業空洞化の克服—産業転換期の日本とアジア」, 中公新書, 2003년 2월.

화를 ‘제조업 활력’과 ‘제조업 해외의존도’, ‘산업연관효과’로 분석하였는데, 제조업의 활력은 ‘성장성’, ‘수익성’, ‘투자’ 관련 자료로 분석하였고, 제조업의 해외의존도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생산의존도’로 평가하였으며 산업연관효과는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으로 판단하였다.⁴⁹⁾ 따라서 본 연구도 선행연구와 같이 한국의 제조업 활력과 제조업 해외의존도, 산업연관효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공동화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제조업 활력 감소

제조업의 활력을 살펴보기 위해 성장성, 수익성, 투자성 등을 분석하였다. 성장성은 제조업 출하액⁵⁰⁾과 생산액⁵¹⁾, 그리고 부가가치⁵²⁾ 증가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조업 출하액 증가율은 2000년 17.0%에서 2011년 32.8%에 도달한 후 2018년 3.4%로 점차 둔화되었다. 생산액 증가율도 2000년 23.9%에서 2011년 36.7%에 도달하였다가 2018년 3.7%까지 하락하였다. 부가가치 증가율도 2000년 9.2%에서 2011년 28.2%를 거쳐 2018년 4.0%로 하락하였다.

[그림 42] 제조업 성장 관련 지표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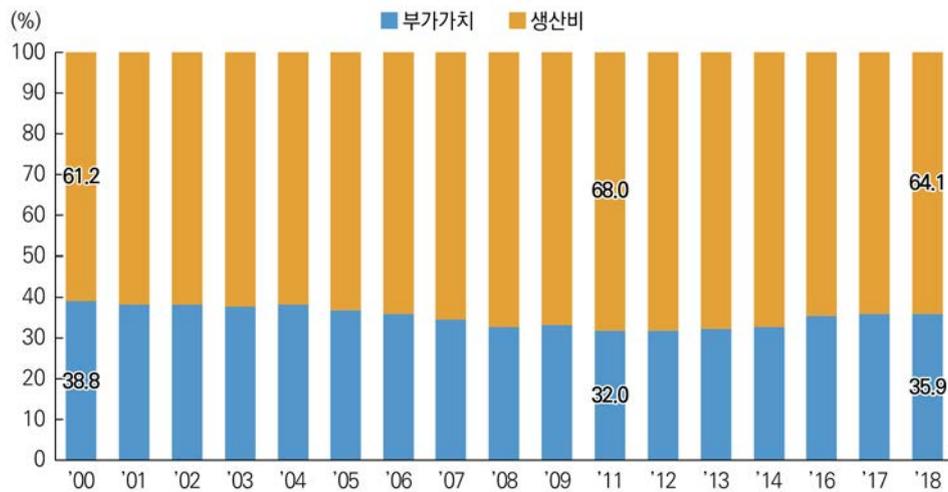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공업·제조업조사」

49) 이부형,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6, 각주 1번 참조.
 50) 출하액은 생산지에서 시장으로 내보내는 상품의 금액을 말함
 51) 생산액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만든 재화의 수량 또는 그 재화를 값으로 계산한 액수를 의미
 52) 부가가치는 생산과정에서 새로이 부가한 가치를 말함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2000년 38.8%에서 2018년 35.9%로 하락하였다. 총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43] 제조업 생산액 대비 생산비 및 부가가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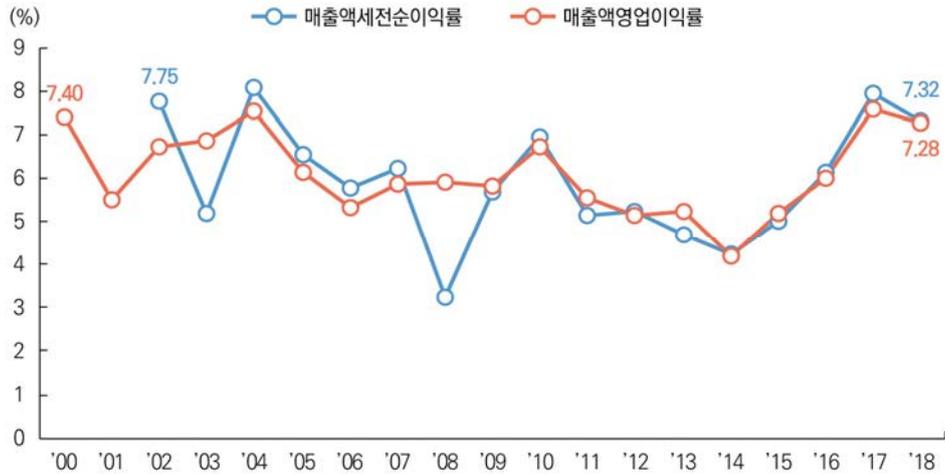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공업·제조업조사」

제조업 수익성 분석결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⁵³⁾은 2002년 7.75%에서 2018년 7.32%로 하락하였고, 매출액영업이익률⁵⁴⁾도 2000년 7.40%에서 2018년 7.28%로 하락하여 수익성은 2000년 초에 비해 약화되었다.

53) 매출액에 대한 세전순이익의 비율을 의미

54)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영업비를 공제해서 계산

[그림 44] 제조업 수익성 관련 지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제조업의 투자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를 나타내는 유형자산⁵⁵⁾ 증가율은 2000년 2.41%에서 2018년 5.02%로 장기적으로는 상승하였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11.22%부터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림 45]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 추이



주: 2010년 이전은 표본조사, 이후는 전수조사에 의한 값으로서 추세 비교를 위해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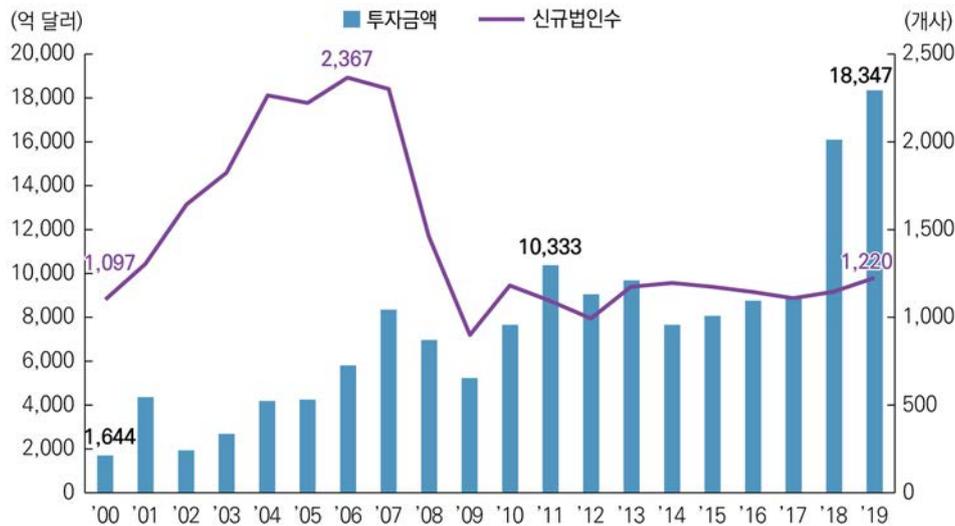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55) 유형자산은 재판매보다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등이 포함

나. 해외의존도 심화

제조업의 해외의존도를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금액과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 수, 그리고 제조업 해외생산의존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1,644억 달러에서 2019년 1조 8,347억 달러로 11.2배 증가하였고,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 수는 2000년 1,097개에서 2019년 1,220개사로 확대되어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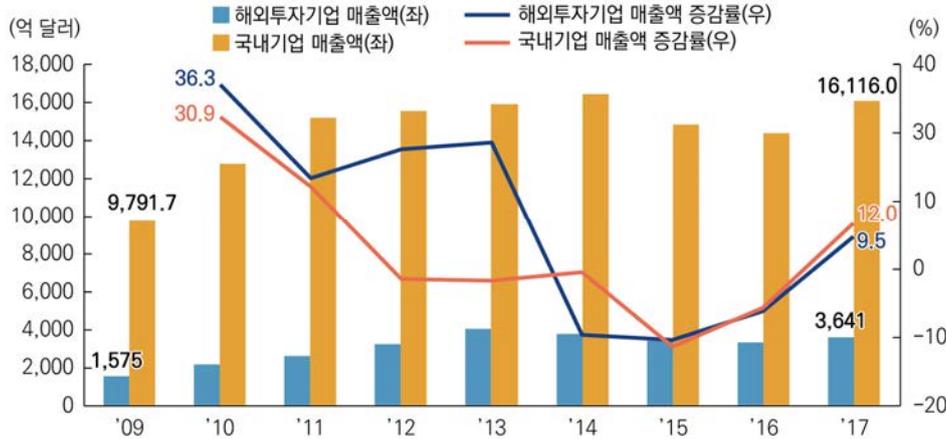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제조업의 해외생산의존도를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기업의 매출액 규모와 해외생산 비중을 분석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매출규모는 업종분류기준⁵⁶⁾이 동일한 기간인 2009년 1,575억 달러에서 2017년 3,641억 달러로 2.3배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 국내 제조업 매출규모는 1.6배 증가한데 그쳤다.

56) 업종별 분류는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분류체계를 적용

[그림 47] 국내 및 해외직접투자 제조업 매출액



주: 2009년에서 2017년의 상기자료는 100만 달러 초과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8년부터는 200만 달러 초과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함
 자료: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이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해외생산비중은 2009년 11.2%에서 2017년 16.7%로 증가하여 해외생산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매출 규모 증가세가 국내 제조업체보다 빠른 가운데 해외생산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여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8] 제조업 해외생산비중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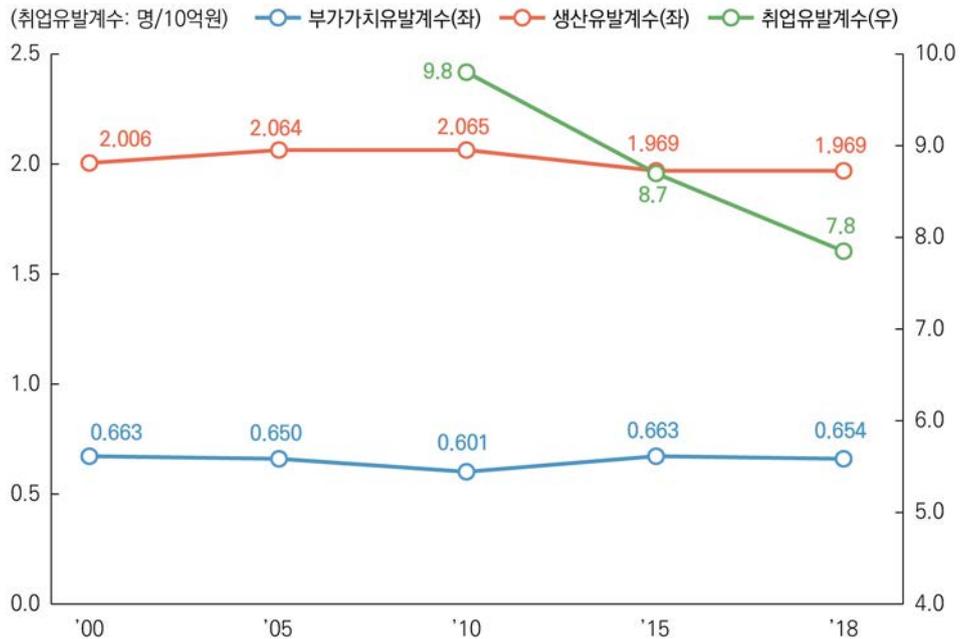


주: 1. 상기자료는 100만 달러 초과기업을 대상으로 함
 2. 해외생산비중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매출액과 국내 매출액의 합산치로 해외직접투자 매출액을 나눈 값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다. 산업연관효과 감소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0년 0.663에서 2018년 0.654로, 생산유발계수도 동 기간에 2.006에서 1.969로 하락하였다.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9.8명에서 2018년 7.8명으로 2.0명 정도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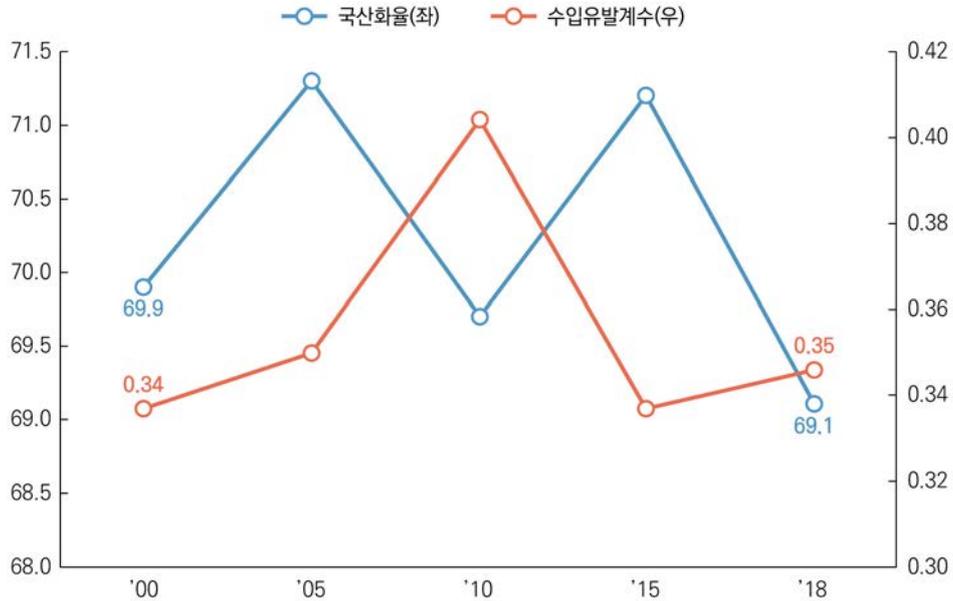
[그림 49] 제조업(공산품)의 산업연관효과 추이



주: 1. 고용표 개편으로 전업환산 기준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부터 제공됨.
 2. 각 유발계수는 각 연도 통합대분류(투입산출표)의 단순평균임.
 3. 2000년, 2005년은 1993 SNA기준이며, 2010년 이후는 2008 SNA 기준임.
 4. 2000년, 2005년, 2010년은 자가공정산출액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의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중간재 국산화율이 2000년 69.9에서 2018년 69.1로 감소하자 국내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도 2000년 0.34에서 2018년 0.3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국내 제조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활력이 저하되고 해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산업연관효과도 약화하는 등 제조업 공동화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0] 제조업(공산품)의 국산화율 수입유발계수 추이



주: 1. 국산화율: 국산품 투입액/중간투입액, 생산가격기준.
 2. 수입유발계수는 각 연도 통합대분류(투입산출표)의 단순평균임.
 3. 2000년, 2005년은 1993 SNA기준이며, 2010년 이후는 2008 SNA 기준임.
 4. 2000년, 2005년, 2010년은 자가공정산출액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2.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불균형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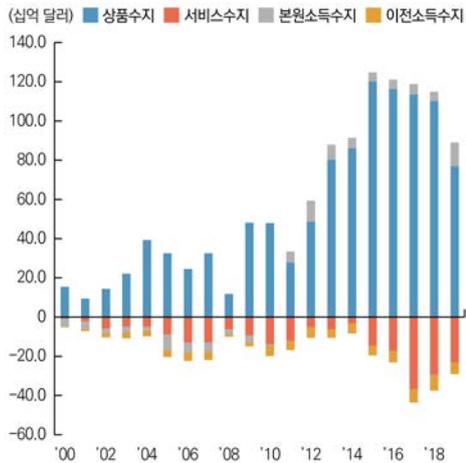
가.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로 나타나고 있다. 상품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5년 1,20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서비스수지는 1991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2017년 3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수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설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가운데 운송수지가 글로벌 해운업황의 부진과 국내 해운업계 구조조정으로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주로 가공수지, 여행수지와 기타사업서비스수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기타사업서비스의 경우 2006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과 국제무역이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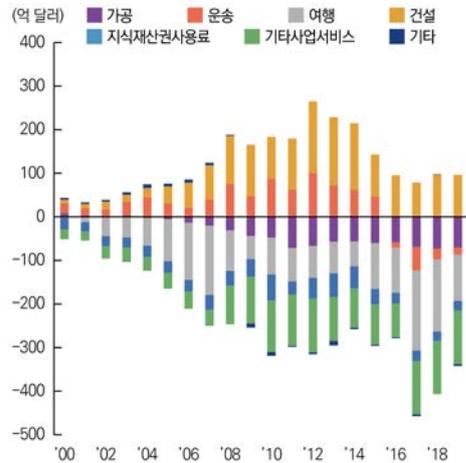
가하면서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타사업서비스는 엔지니어링, 연구 개발, 디자인, 법무 및 회계, 경영컨설팅, 광고, 시장조사 등 다양한 기업경영과 관련된 지식집약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해외생산이 늘어나면서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기술 개발, 디자인, 법률, 회계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51]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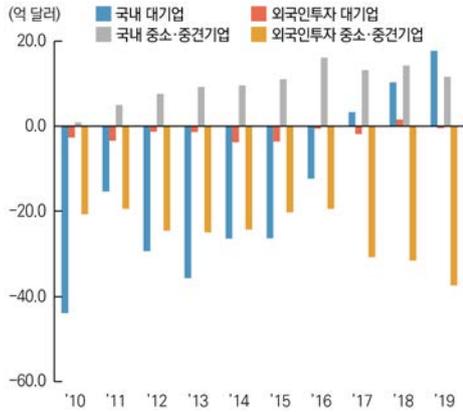
[그림 52] 서비스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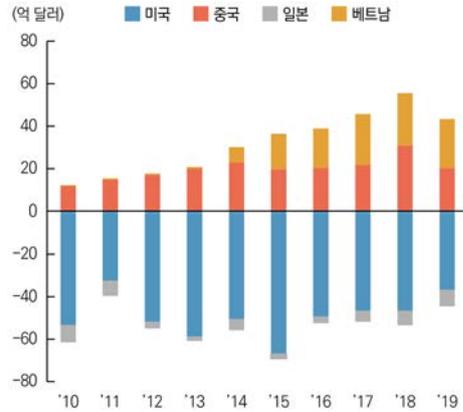
한편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수지 개선이 진행되면서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45.3억 달러 적자에서 2019년 8.0억 달러 적자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50.5억 달러 적자에서 2019년 36.8억 달러 적자로 감소한 반면 일본에 대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5.4억 달러 적자에서 2019년 7.8억 달러 적자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의 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전기전자제품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9년 기준 각각 31.8억 달러 적자와 8.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53]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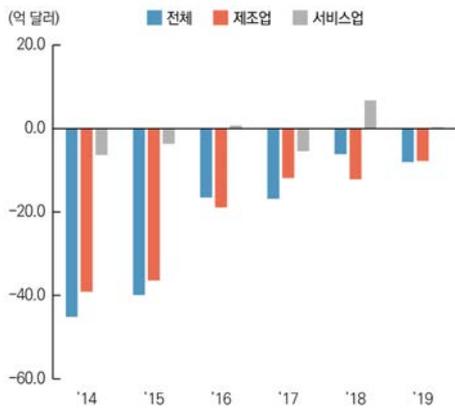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54] 거래상대국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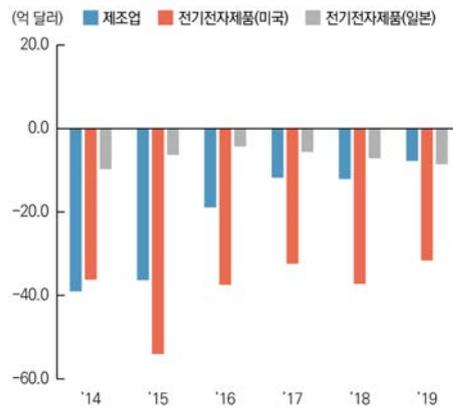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55]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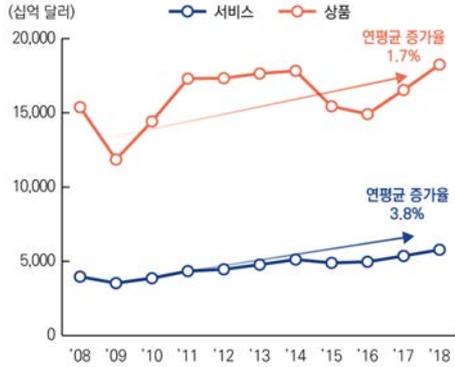
[그림 56] 주요국 전기전자제품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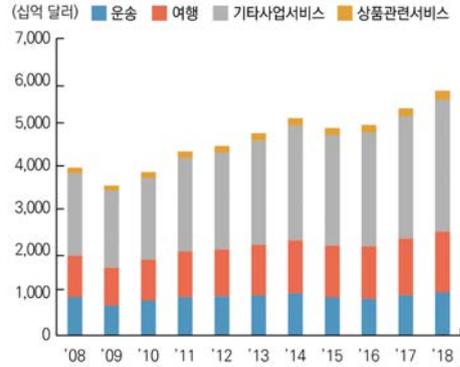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문제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WTO(2019)에 의하면, 전체 무역액에서 상품의 비중이 높지만 2008~2018년 동안 서비스 무역액 증가율이 연평균 3.8%로, 상품 무역액의 연평균 증가율 1.7%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무역액에서 기타사업서비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타 사업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 없이 서비스수지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그림 57]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액 추이



[그림 58] 세계 서비스 무역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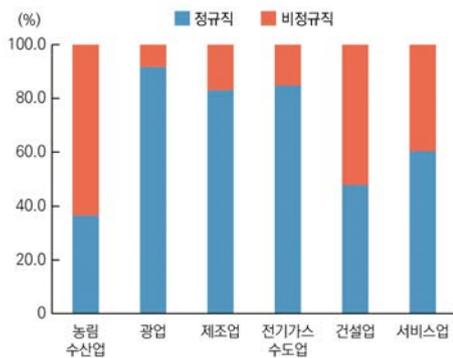


자료: 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9」 자료: 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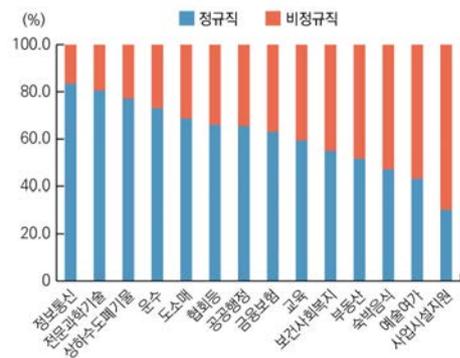
나. 업종 간 임금 격차 증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서비스업 내 생산성의 차이는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 격차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득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별로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의 정규직 비중이 약 80~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은 60%대, 건설업은 40%대, 농림수산업은 30%대로 낮다. 한편 서비스업 내에서 정규직 비중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이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이 약 80% 이상이지만 사업서비스의 경우 약 40%에 불과하다.

[그림 59] 산업별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중 [그림 60] 서비스업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중



주: 2019년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2019년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월 임금총액이

650.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401.7만원, 광업 397.7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종 중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 623.6만원, 전문과학 및 기술업이 490.1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446.3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업이 187.5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직 등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표 11] 산업별 월근로시간 및 임금총액

(단위: 시간, 천원)

		근로시간	임금총액	시간당 임금총액
전 산업		163	3,490	21
광업		176	3,977	23
제조업		176	4,017	2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60	6,502	41
건설업		136	2,951	22
서 비 스 업	도매 및 소매업	166	3,372	20
	운수업	164	3,476	21
	숙박 및 음식점업	159	1,875	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4	4,463	27
	금융 및 보험업	162	6,236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6	2,755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1	4,901	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63	2,332	14
	교육 서비스업	142	3,474	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2	2,960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6	2,819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0	2,517	1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79	3,506	20

주: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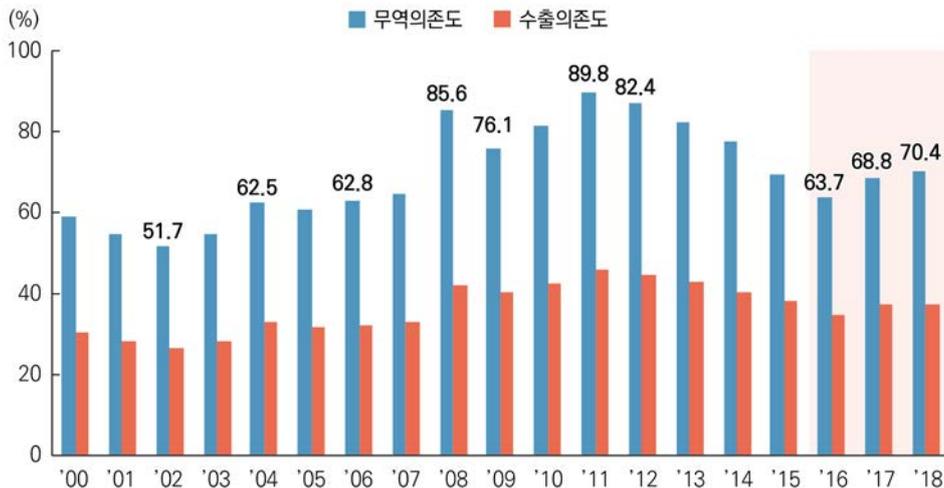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3.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의 위험

가. 수출주도 성장의 동력 약화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수출주도 성장⁵⁷⁾을 추진해 왔다. 수출주도 성장은 규모의 경제, 특화에 따른 분업효과, 선진기술의 학습효과, 경쟁환경 노출 등의 장점을 통해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내수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세계경제 위기 등 대외환경 변화시 경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외환시장 개방 등 시장 개방이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⁵⁸⁾

[그림 61] 우리나라의 무역 및 수출 의존도 추이



자료: 무역협회 데이터에 기반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수출주도형 경제를 추진해온 우리나라 경제는 높은 대외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수출입액/명목GDP)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기간 평균 58.9%를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2018년 평균 76.8%로 상승하였다. 2011년 이후 전반적 하락세를 보였던 무역의존도는 2016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6년 63.7%에서 2018년 70.4%로 상승하였다. 수출의존도(수출액/명목GDP)도 2011

57) 수출주도 성장은 수출을 통한 해외수요 확대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시장의 구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수요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산업화를 진행하는 경제성장 방식

58) 이근테 외.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내수성장”, LGERI 리포트, 2014.

년 이후 전반적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6년 35.0%에서 2018년 37.3%로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17년 기준 미국 20.3%, 중국 34.0%, 일본 28.2%, 프랑스 44.8%, 이탈리아 49.7% 대비 높은 수준이며 독일의 70.7%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의 정체양상, 보호무역주의 확대, 중국경제 고도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감소하고 설비투자, 소비 등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2001~2007년 연평균 12.3%에서 2011~2019년 2.1%로 하락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동기간 연평균 5.2%에서 2.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ECOS), 무역협회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수출과 경제성장률간 연계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수출둔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에 밀접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2001~200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간 상관계수는 -0.15 수준이었으나 2011~2019년 0.79로 상승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성장률 하락과 경제성장률 둔화간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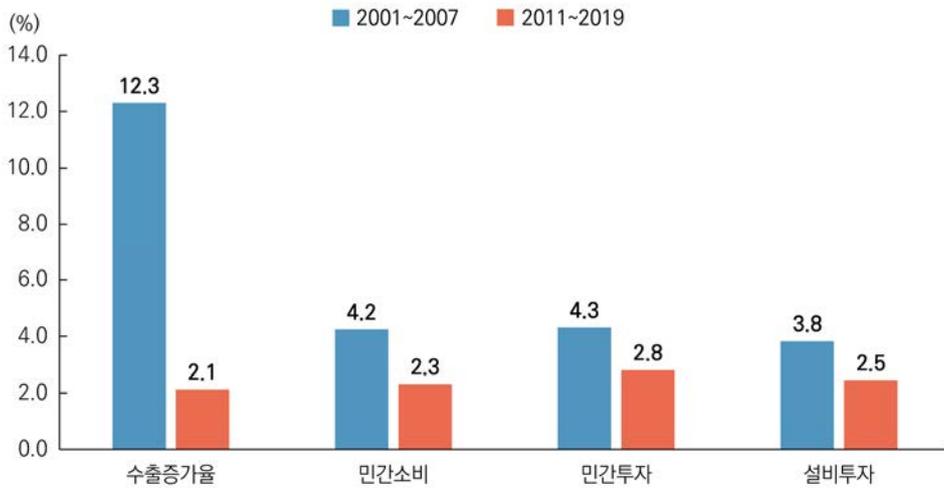
[표 1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간 상관계수 추이

구분	2001~2019	2001~2009	2010~2019
상관계수	0.381	-0.146	0.787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내수(민간소비, 민간투자, 설비투자) 증가율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증가율이 2001~2007년 연평균 12.3%에서 2011~2019년 2.1%로 하락한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율은 동기간 4.2%에서 2.3%로, 민간투자 증가율은 4.3%에서 2.8%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3.8%에서 2.5%로 하락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 증가율 하락이 민간소비, 민간투자, 설비투자 등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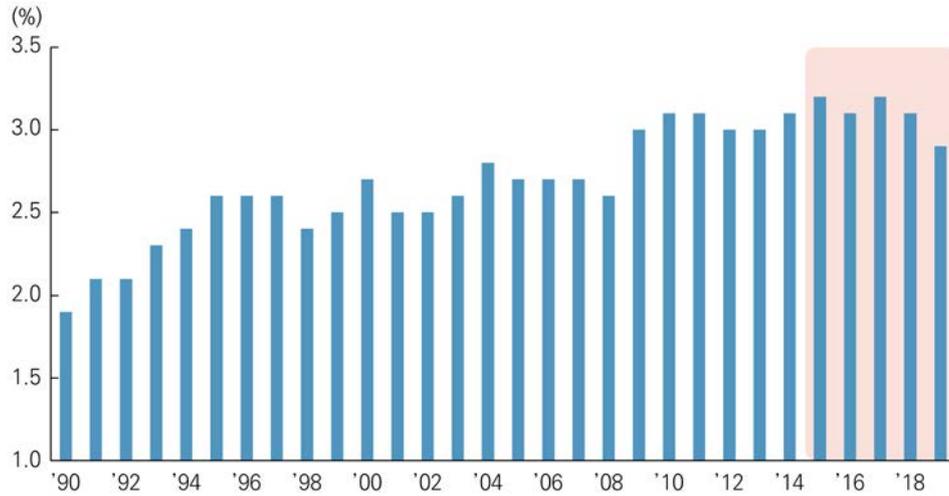
[그림 63]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민간소비/민간투자/설비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ECOS), 무역협회

한편 우리나라 수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수출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시장 내 수출 순위도 하락하였다. 세계 수출 총액 중 우리나라의 수출점유율은 2000년과 2005년 2.7%를 나타낸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0년 3.1%, 2015년 3.2%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전반적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 기준 2.9%로 낮아졌다.

[그림 64] 우리나라 수출점유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수출 순위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며 2015년 세계 6위에서 2019년 7위로 하락하였다

[표 13] 글로벌 수출점유율 및 순위 추이

(단위: %)

순위	국가명	2019	국가명	2015	국가명	2010
1	중국	13.0	중국	13.9	중국	10.5
2	미국	8.7	미국	9.2	미국	8.5
3	독일	8.0	독일	8.1	독일	8.3
4	네덜란드	3.8	일본	3.8	일본	5.1
5	일본	3.7	네덜란드	3.4	네덜란드	3.8
6	프랑스	3.0	한국	3.2	프랑스	3.5
7	한국	2.9	프랑스	3.1	한국	3.1
8	이탈리아	2.8	홍콩	2.8	이탈리아	3.0
9	홍콩	2.8	영국	2.8	영국	2.8
10	영국	2.5	이탈리아	2.8	벨기에	2.7

자료: 한국무역협회

〈참고〉 수출과 투자간 연계성 실증분석⁵⁹⁾

수출과 설비투자에 집중하여 수출과 내수간 연계성 및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출과 설비투자는 일반적으로 「수출↑(↓) → 생산↑(↓) → 투자↑(↓)」의 순환구조를 보이며 직접적 연계성⁶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실증분석 모형의 설명변수로는 최용재(2008) 등을 고려하여 수출, 경제성장률, 자본의 상대가격 등을 설정하였다. 모형에 활용된 설비투자함수는 자본재(설비투자)에 대한 수요는 생산에 비례하며 비용에는 반비례한다는 최적자본스톡이론⁶¹⁾에 기반한다.

〈 회귀분석 모형 〉

1) 분석모형

$$I_t = \beta_0 + \beta_1 Ex_t + \beta_2 GDP_{t-1} + \beta_3 RP_t + e_t$$

2) 변수설명

변수명	설 명
설비투자증가율(I)	계절조정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전분기대비)
수출증가율(EX)	계절조정 실질 수출 증가율(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GDP)	계절조정 실질 GDP 증가율(전분기대비)
자본재 상대가격 변화율	(설비투자 GDP 디플레이터/GDP 디플레이터) 비율의 증가율(전분기대비)

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수출과 설비투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설비투자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수출이 증가할 때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할 경우 설비투자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GDP증가율 등의 회귀계수는 양(+)의 부호로, 자본재 상대가격의 회귀계수는 음(-)의 부호로 추정되었다.

59) 박승호, “수출이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NABO 경제동향&이슈」, 2018. 8.

60) 박종현 외,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분석,” 2018.

61) Jorgenson(1967), Bean(1981) 등이 제시한 최적자본스톡이론에서는 장기적으로 최적자본스톡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는 생산량(또는 수요)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반면 자본재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감소한다고 가정

[모형 추정 결과]				
구분	설명변수			
종속변수	상수항	수출증가율	전분기 GDP 증가율	자본재 상대가격 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6.735	0.402***	1.456**	-7.872
$R^2=0.20$				
주: 분석기간 2000년 1분기 ~ 2018년 2분기				

나. 주력 품목의 수출 경쟁력 약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및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신흥국의 경제고도화, 기술 축적 등으로 글로벌 수출시장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으로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를 축소하며 첨단부품 및 소재,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재 부문에서도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⁶²⁾ 중국의 생산이 확대된 화학, 제철 등 품목 뿐 아니라 최근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첨단 IT 제품으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체 공산품(Manufactures)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4.12% 수준에서 2018년 4.02%로 0.1%p 하락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인 통신기기, 자동차, 철강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0년 5.79%에서 2015년 6.15%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5.96%를 기록하였다. 기계 및 운송장비도 최근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계 및 운송장비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0년 5.18%에서 2015년 5.37%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 5.14%로 하락하였다. 통신장비의 경우도 2010년 6.56%에서 2018년 1.53%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자동차 등 운

62) 이근테 외,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내수성장”, LGERI 리포트, 2014.

송장비의 수출점유율은 2010년 6.33%에서 2018년 4.01%로 하락하였다. 섬유 및 의류 품목의 세계 점유율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섬유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0년 4.34%에서 2018년 3.14%로 하락하였으며 의류는 동기간 0.45%에서 0.43%로 하락하였다.

한편 화학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8년 기준 3.61%로 공산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4.02%를 하회하였다. 화학제품 중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인 제약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전반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이 0.6%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전자데이터처리 및 사무기기 등의 시장 점유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및 전자부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8.94%에서 2018년 17.79%로 2배 상승했으며 자동데이터처리 기기 및 사무기기의 시장 점유율도 동기간 2.72%에서 5.53%로 상승했다.

[표 14] 우리나라 수출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구 분	2001	2005	2010	2015	2018
공산품	3.00	3.54	4.12	4.15	4.02
전자기계 및 운송장비	3.49	4.50	5.18	5.37	5.14
사무 및 통신장비	5.27	6.51	5.97	6.36	8.26
- 전자데이터처리 및 사무기기	4.07	3.80	2.72	2.37	5.53
- 통신장비	5.95	8.16	6.56	5.79	1.53
- 집적회로 및 전자부품	6.17	7.98	8.94	10.90	17.79
운송장비	3.13	4.30	6.33	5.74	4.01
- 자동차	2.71	4.10	4.98	5.34	4.09
화학제품	2.09	2.52	2.89	3.19	3.61
제약	0.24	0.18	0.26	0.44	0.60
철강제품	4.44	4.53	5.79	6.15	5.96
섬유제품	7.39	5.12	4.34	3.69	3.14
의류제품	2.22	0.93	0.45	0.47	0.43

자료: WTO 데이터에 기반해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 무역특화지수 하락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조선 등의 무역특화지수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83, 2015년 0.62, 2019년 0.56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자동차부품의 무역특화지수도 2015년 0.68에서 2019년 0.62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경쟁력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수출경쟁력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무역특화지수는 2015년 0.73에서 2019년 0.62로 하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인 무선통신기기, 조선업(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의 수출특화지수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무선통신기기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58에서 2019년 0.02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86에서 2019년 0.79로 하락하였다. 컴퓨터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08에서 2019년 -0.14로 수입특화가 강화되었다.

[표 15]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별 무역특화 지수

품목명	무역특화지수		
	2011	2015	2019
반도체	0.21	0.24	0.33
자동차	0.83	0.62	0.56
석유제품	0.39	0.35	0.40
자동차부품	0.57	0.68	0.6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0.68	0.73	0.62
합성수지	0.66	0.61	0.62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0.86	0.80	0.79
철강판	0.24	0.39	0.44
무선통신기기	0.58	0.45	0.02
플라스틱 제품	0.04	0.27	0.31
컴퓨터	-0.08	-0.08	-0.14
원동기및펌프	0.01	0.01	0.13
정밀화학원료	-0.19	-0.20	-0.20
석유화학중간원료	-	0.62	0.77

주: 2019년 MTI 3단위 기준 우리나라 수출상위 15대 품목순(건전지및축전지 14위 제외)

자료: 무역협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

한편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무역특화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21에서 2019년 0.33으로 수출특화가 강화되었다. 철강판의 무역특화지수도

2011년 0.24에서 2019년 0.44로 상승하였으며 석유화학 제품도 전반적으로 수출특화 상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밀화학원료는 2011년 -0.19에서 2019년 -0.20으로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였다.

무역특화지수는 해당국가의 특정 품목의 순수출액을 특정 품목의 총 교역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text{무역특화지수} = (\text{수출액} - \text{수입액}) / (\text{수출액} + \text{수입액})$$

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 1이면 완전 수출특화 상태이며 -1인 경우 완전 수입특화 상태를 의미한다.

0이상 1이하는 해당 제품 및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국제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 수출의 편중도 심화 및 신시장 창출 어려움

신흥국 등 신시장 성장으로 시장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의 품목별·국가별 집중도가 심화되며 시장확대 및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 품목 및 시장에 대한 집중도 심화는 외부요인에 따른 수출변동성을 높이고, 특정 품목 및 특정 시장의 점유율 하락 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1) 지역별 수출편중도 심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위 3개 교역대상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10년 41.8%에서 2015년 45.8%로 상승하였으며, 2018~2019년에는 47.1%를 기록하였다. 상위 5개, 상위 10개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위 5개 국가 수출비중은 2010년 50.5%에서 2018~2019년 59.1%로 상승하였으며 상위 10개 국가 수출비중은 2010년 62.4% 수준에서 2018~2019년 71.0%로 상승하였다.

[표 16] 우리나라 수출의 국가별 점유율 추이

(단위: %)

순위	국가	2018 ~2019	국가	2015	국가	2010	국가	2001
1	중국	26.0	중국	26.4	중국	25.1	미국	21.0
2	미국	12.7	미국	13.5	미국	10.7	중국	12.2
3	베트남	8.4	홍콩	5.9	일본	6.0	일본	11.1
4	홍콩	6.9	베트남	5.4	홍콩	5.4	홍콩	6.3
5	일본	5.1	일본	4.9	싱가포르	3.3	대만	3.9
6	대만	3.3	싱가포르	2.9	대만	3.2	독일	2.9
7	인도	2.7	인도(인디아)	2.3	인도(인디아)	2.5	싱가포르	2.7
8	싱가포르	2.2	대만	2.3	독일	2.3	영국	2.3
9	멕시코	2.0	멕시코	2.1	베트남	2.1	인도네시아	2.2
10	필리핀	1.8	호주	2.1	인도네시아	1.9	말레이시아	1.8
	상위3대국가	47.1	상위3대국가	45.8	상위3대국가	41.8	상위3대국가	44.2
	상위5대국가	59.1	상위5대국가	56.1	상위5대국가	50.5	상위5대국가	54.5
	상위10대국가	71.0	상위10대국가	67.8	상위10대국가	62.4	상위10대국가	66.4

자료: 무역협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별로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편중도가 높은 상황이다. 2010년 이후 10대 수출국 중 아시아 국가가 7~8개를 점유하는 상황이다. 2018~2019년의 경우 10대 수출국 중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아시아 국가이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6%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1년 12.2% 수준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상승하며 2018~2019년 26.0%로 높아졌다. 베트남에 대한 수출비중도 상승세를 보이며 2010년 2.1%에서 2018~2019년 8.4%로 높아졌다. 최근 상위 8개 아시아 수출 대상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총수출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2001년 상위 8개 아시아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41.9%였으나 2010년 49.4%, 2018~2019년 56.4%로 상승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경제고도화로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증가율은 2003~2011년 동안 연평균 20%에 육박했으나 2012년 이후 5%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 석유류 등에 대한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⁶³⁾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은 -10.4%였으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16.0%를 기록하였으며 2016~2017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수출 간 상관관계도 2011~2013년 0.87에서 2017~2019년 0.52로 악화되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대체시장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 17] 중국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상관계수 변화

	2011.1Q~2013.4Q	2014.1Q~2016.4Q	2017.1Q~2019.4Q
상관계수	0.87	0.77	0.52

자료: 무역협회 데이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 수출품목 집중도 심화 및 신규품목 경쟁력 제고 미흡

우리나라의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대외여건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이다. 2018년 기준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13개 수출 주력품목 중 5개 품목, 2019년 기준 13개 수출 주력품목 중 9개의 품목이 전년대비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수출품목의 집중 및 불균형에 따른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3대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상위 3대 수출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전체수출 중 25.8%였으나 2018~2019년 34.1% 수준으로 8.3%p 상승하였다. 2018~2019년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3대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이며 전체수출 중 각각 19.2%, 7.6%, 7.3% 점유하고 있다.

63) 정희철 외,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국제무역연구원, 2020.

[표 18] 우리나라 수출의 품목별 점유율 추이

(단위: %)

순위	품목	2018 ~2019	품목	2015	품목	2010	품목	2001
1	반도체	19.2	반도체	11.9	반도체	10.9	반도체	9.5
2	석유제품	7.6	자동차	8.6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10.5	자동차	8.8
3	자동차	7.3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7.6	자동차	7.5	컴퓨터	7.4
4	자동차부품	4.0	무선통신기기	6.2	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	7.3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6.6
5	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	4.0	석유제품	6.1	석유제품	6.8	무선통신기기	6.6
6	합성수지	3.8	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	5.7	무선통신기기	5.9	석유제품	5.2
7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3.6	자동차부품	5.1	자동차부품	4.1	합성수지	3.0
8	철강판	3.3	합성수지	3.5	합성수지	3.7	철강판	2.7
9	무선통신기기	2.7	철강판	3.1	철강판	3.6	의류	2.6
10	플라스틱 제품	1.8	플라스틱 제품	1.5	컴퓨터	2.0	영상기기	2.3
	상위3대품목	34.1	상위3대품목	28.1	상위3대품목	28.9	상위3대품목	25.8
	상위5대품목	42.1	상위5대품목	40.4	상위5대품목	43.0	상위5대품목	39.0
	상위10대품목	57.3	상위10대품목	59.4	상위10대품목	62.2	상위10대품목	54.8

주: 2019년 MTI 3단위 기준 우리나라 수출상위 10대 품목순
 자료: 무역협회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상위 3대 품목 중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는 2001~2015년 10%내외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19.2%로 전체 수출의 1/5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상위 5대 수출품목의 점유율은 2001년 39.0%에서 2018~2019년 42.1%로 3.1%p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 주력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00년 10대 주요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이 2019년에도 유지되었다. 2001~2019년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품목이 동일한 상황이다. 2001년 대비 2018~2019년 수출 10대 품목으로 새로 진입한 3개 품목은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제품, 디스플레이 및 센서 제품이다. 반도체의 경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중화학제품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신품목 발굴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IV.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1. 제조업 기반 강화

가. 제조업 고도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산업구조는 전체 산업의 실질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탈공업화가 진행되었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과 일본처럼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실질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그 동안 추격형 전략의 성공으로 세계 6위의 제조 강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양적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봉착하였고, 주력산업의 성장이 정체되었으며 신산업 창출은 지연되어 비용절감을 원하는 기업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 등 신흥 제조 강국의 부상, 제조업 환경변화를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혁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⁶⁴⁾ 즉, 우리나라가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에서 벗어나 제조업 6위에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업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생산 기반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거나 생산 공정의 상당부분을 해외 아웃소싱에 의존했던 국가들에게서 자국 산업의 공동화, 내수 및 고용 감소 문제 등이 부각되었다. 그러자 주요국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도록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산업부흥정책을 수립하였다.⁶⁵⁾

주요국은 자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리쇼어링, 수입규제 등 전방위적인 산업부흥전략을 통해 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산업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육성, 노동·일자리 등 경제사회전반의 성장 기반을 확

64) 대한민국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2019.

65) Stiglitz, J., J. Y. Lin, C. Monga, *The Rejuvenation of industrial policy*,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628, The World Bank Development Economics Vice Presidency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2013.

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이 주요 기업(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들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가운데, 중국도 연구 인프라 개선, 풍부한 데이터 등에 힘입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였다.⁶⁶⁾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American AI Initiative를 추진하는 한편 화웨이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독일 및 일본도 강점을 나타내는 3D 프린팅, 로봇기술 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AI 분야 등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모든 것이 연결되어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과 처리가 고도화되고, 지능을 가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적인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⁶⁷⁾

반면 우리나라는 ICT를 활용한 제조-서비스 융·복합이 주요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혼합현실 등), 바이오, 에너지, 로봇, 스마트 자동차, 3D 프린팅, 소재 등 분야에서 주요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수준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주요 부문의 R&D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 스마트트화(AI기반 산업지능화), 친환경화(클린팩토리), 융복합화(제조+서비스 이업종간 융합화)로 산업구조혁신 가속화 내용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⁶⁸⁾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공장의 해외이전에 의한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포함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중장기 산업발전비전을 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⁶⁹⁾ 특히, 해외이전부문을 대체할 고부가

66) 한국은행, “2020년 이후 글로벌 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1),” 「국제경제리뷰」, 2020.

67) 이은민,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통신정책, 2016.

68)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2019.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2018년 25%에서 2030년 30%까지 상승시키고,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18년 102.5(1천불/명)에서 144.6(1천불/명)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언급. 또한 제조업 내 신산업·신품목 비중은 2018년 16%에서 2030년 30%로 향상시키고, 세계일류 기업 수는 2018년 573개에서 2030년 1,200개로 확대하면서 제조업 실질부가가치는 2018년 511조원에서 2030년 789조원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

가치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업 분야, 그리고 부품·소재·장비 등 생산기반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⁷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5] 제조업 고도화



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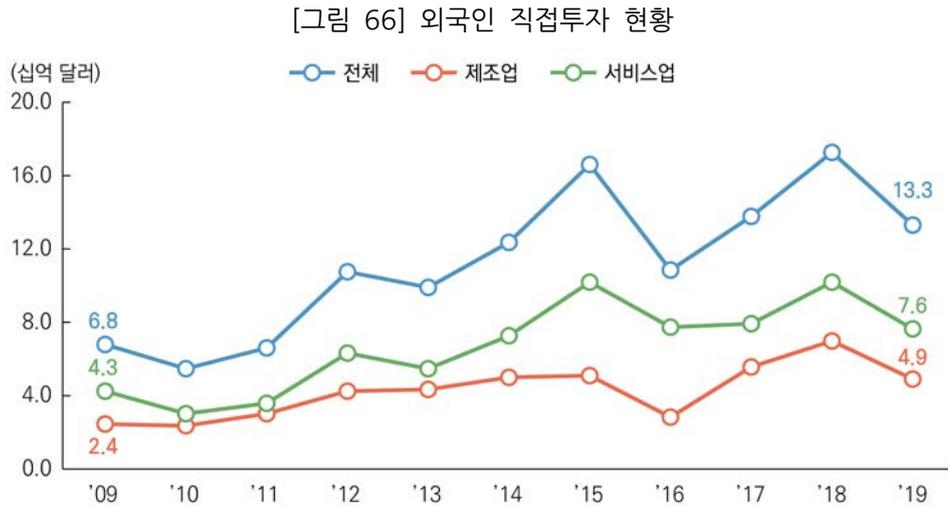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 등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민간투자 역시 하락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8년 「외국인직접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세제·입지·현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을 추가로 개방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전면 허용하였다.

지난 11년간 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 도착기준으로 2009년 68억 달러에서 2019년 133

69) 이부형,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경제주평」, 2016, 8쪽.

70) 강성진·이홍식,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탈산업화에 미친 효과분석,” 「국제통상연구」, 2010.

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9년 24억 달러에서 2019년 4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9년 43억 달러에서 2019년 7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주: 도착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반적 경영환경 만족률은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은 26.7%로 2017년 27.3%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보통’ 응답률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률은 6.4%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⁷¹⁾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점 개선분야로 제시한 부분은 노무⁷²⁾ 및 세무⁷³⁾, 그리고 규제⁷⁴⁾ 분야라는 응답이 많았다.⁷⁵⁾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설문조사결과와 세계경제포럼

71) KOTRA,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19, 9쪽.

72) 노무환경에서는 ‘높은 임금수준’(26.1%)과 ‘인력수급’(21.4%)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식되었고, ‘지방에서 인력 채용 어려움’(20.9%)과 ‘노조 관련 이슈’(18.6%), ‘인건비 관련 조세혜택 및 지원금 부족’(15.1%), ‘해고경직상’(15.1%), ‘노동정책 낮은 일관성’(11.9%)으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

73) 세무환경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세무 조사 관련’(26.4%)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빈번한 세법 개정’(23.5%), ‘조세 제도 정보 부족’(22.6%), ‘높은 조세 부담’(20.0%) 순으로 응답됨

74) 규제환경 관련 애로사항은 ‘규제 개혁 정책 정보 취득이 어렵다’는 응답비율은 23.8%로 2017년 대비 4.5%p 증가한 반면, ‘정부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 있음’(9.9%)에 대한 응답비율은 2017년 대비 2.0%p 감소하였고, ‘규제 개선 의견 제시 어려움’(20.9%)에 대한 응답비율은 2017년과 유사함

75) KOTRA,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19, 11쪽.

(WEF)의 국가경쟁력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애로사항들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은 2019년 13위(79.6점)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4개 분야 12개 부문의 평가 항목 중 거시경제안정성과 ICT보급, 인프라, 혁신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표 19]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비교(싱가포르, 한국)

	기본환경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	
	제도	인프라	ICT 보급	거시 경제 안정성	보건	기술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스템	시장 규모	기업 활력	혁신 역량
싱가포르	80	95	87	100	100	79	81	81	91	72	76	75
한국	66	92	93	100	99	74	56	63	84	79	70	79
차이	-14	-3	6	0	-1	-5	-25	-18	-7	7	-6	4

자료: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평가보고서」, 2019

한편 1위인 싱가포르와 비교해보면, 제도(-14), 생산물시장(-25), 노동시장(-18), 금융시스템(-7)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108 → 93위), ‘국내이직의 용이성’(75 → 70위), ‘급여 및 생산성’(16 → 14위) 등은 개선되었으나, ‘정리해고비용’(114 → 116위), ‘고용의 유연성’(87 → 102위), ‘노사협력’(124 → 130위) 등에서 하락하면서 국제경쟁력은 48위에서 51위로 낮아졌다.

‘정리해고비용’과 ‘고용의 유연성’, ‘노사협력’ 등에 대한 세계경제포럼의 낮은 국제경쟁력평가점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결과인 ‘노조 관련 이슈’(18.6%), ‘해고경직성’(15.1%), ‘노동정책 낮은 일관성’(11.9%)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부문에서 ‘온라인행정’(1위), ‘국토관리의 질’(6위) 등이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규제부담’(87위), ‘지적재산권보호’(50위), ‘언론의 자유’(36위), ‘부패지수’(42위)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규제부담’이 87위를 차지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애로사항 관련 설문조사결과인 ‘규제 개혁 정보 취득이 어렵다’(23.8%)와 ‘정부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 있음’(9.9%), 그리고 ‘규제 개선 의견 제시 어려움’(20.9%) 항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인 싱가포르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생산물 시장의 경우, ‘조세 및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61위), ‘무역장벽 정도’(77위), ‘서비스업경쟁’(48위), ‘관세복잡성’(83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 중 ‘조세 및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왜곡’과 ‘관세복잡성’도 외국인직접투자 애로사항 관련 설문조사결과인 ‘빈번한 세법개정’, ‘조세제도 정보 부족’, ‘높은 조세부담’, ‘세무행정 투명성’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규제와 세무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방식의 전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규제 합리화의 노력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⁷⁶⁾

아울러 정부는 국제교역이 가능한 노무 및 세무 행정, 그리고 규제업무 등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이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업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중간재 성격을 지닌 노무 및 세무 행정, 금융, 보험, 법률, 회계 및 컨설팅의 경우 국제표준의 도입과 더불어 고급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7]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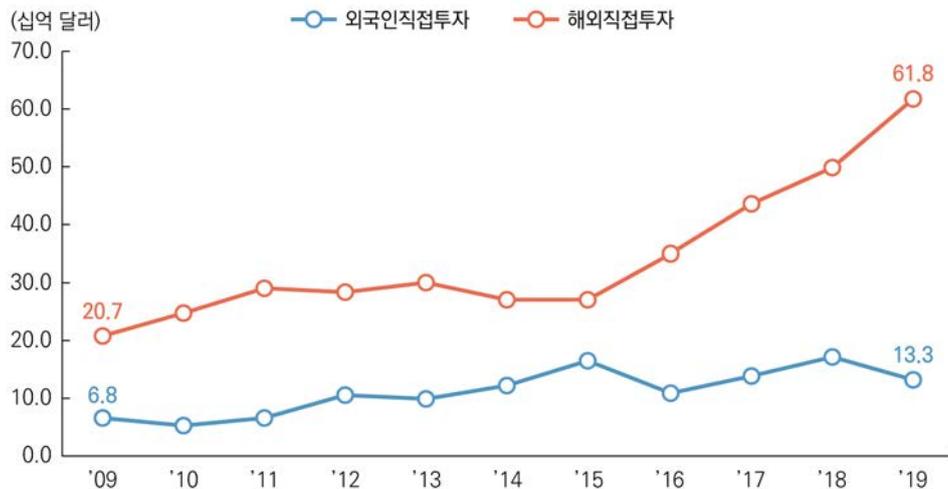


76) 이부형,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경제주평』, 2016, 9쪽.

다. 리쇼어링 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가 2009년 68억 달러에서 2019년 133억 달러로 2배 정도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투자금액 기준)는 2009년 207억 달러에서 2019년 618억 달러로 3배 정도 확대되었다.

[그림 68]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주: 외국인직접투자는 도착기준, 내국인 해외직접투자통계는 투자기준으로 작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최근 미·중 무역마찰, 한·일 무역 분쟁,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과거 비용절감 측면에서 중국 등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주요국은 자국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생산차질(Shutdown) 등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인력지원, 입지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기존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해외사업장의 철수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

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관세의 감면, 기업규모와 입지지역에 따라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수는 총 80개사인데, 이중 철회한 2개사와 폐업한 7개사를 제외하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복귀기업은 총 71개사로 조사되었다.⁷⁷⁾

[표 20] 국내복귀기업 지원현황

구분	내 용
보조금	입지투자금의 42%이내(5억원 한도), 설비투자금의 31%이내 지원
세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관세 4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0% 감면
인력	근로자 1인당 고용보조금 최대 720만원 지원(1년간), 외국인 생산관리자 E7 비자 발급
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및 수출 보증보험료 할인
구조조정컨설팅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지원(총 비용의 70% 이내)

자료: 산업통상자원·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7.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가 적은 것은 정책과 실수요가 불일치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유턴 촉진을 위한 「종합패키지」를 도입하였다.⁷⁸⁾ 문제는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 비해 협소한 내수시장,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력수급의 어려움, 자동화에 대한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리쇼어링이 단기간에

77) 2020년 5월 기준 산업통상부 제출자료

78) 관계부처 합동,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020, 72~73쪽. 세제 측면에서 기존 해외사업장 감축율 요건(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은 없애고, 축소수준에 따른 감면한도를 설정하여 그간 감축량은 크지만 감축율 요건 미충족으로 세제지원에서 배제되었던 기업도 지원하게 되었음. 입지 측면에서는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배정하고, 범부처 유턴유치단 밀착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 맞춤형 입지로 해소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전지역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 신설(3차 추경)할 예정. 설비와 관련하여서는 유턴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사업 지원을 강화(3차 추경)하기로 하였음. 금융 측면에서는 유턴기업 대상 시설 및 설비투자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인력 측면에서는 통상 금지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직접 지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음.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유턴기업에 대해 신속한 화학안전 제도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및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⁷⁹⁾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3월 국내 해외진출기업 1,028개사를 바탕으로 조사한 「해외진출기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62.4%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7.5%)이, 해외법인소재지는 ‘중국’(82.6%)이, ‘생산비용 절감’(73.6%) 목적의 기업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해외사업장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기업의 93.6%가 ‘현행 유지 또는 동일지역 내 확대’라고 답변한 반면, ‘축소/철수’의향 기업은 4.2%, ‘타 지역 이전’의향 기업은 2.2%로 나타났다.⁸⁰⁾ 기업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생산비용 상승’(66.7%),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0%), ‘기타’(8.3%)로 밝혀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먼저, 기존 사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규제 방식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복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등과 같이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영역이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국민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⁸¹⁾

전체 응답기업의 93.6%가 국내복귀를 희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⁸²⁾

또한, 정부는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리쇼어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남북경협 특구를 통한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⁸³⁾ 북핵 문제로 인해 2016년 2월 잠정적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은 125개사가 참여하고 5.5만 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는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에

79) 박은하, “정부, 리쇼어링 정책 내고 ‘호소; ...기어들’ 글세,” 경향신문, 2020. 5. 17.

80) ‘축소/철수’와 ‘타 지역 이전’의향 기업은 2017년 대비 각각 2.3%p와 0.7%p 증가함

81) 이부형,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경제주평」, 2016, 9쪽.

82) 조철, 「코로나19에 따른 GVC 변화논의와 리쇼어링 정책」, 산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간담회자료, 2020. 현재 우리기업은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의 비용 상승요소들에 직면해서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도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스마트화, 자동화, 효율화해서 고용을 최소화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국내 제조부문이 유지된다면, 제조업과 관련된 기획, 연구 개발, 마케팅 등의 분야와 더불어 관련 산업 등에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도 있음

83) 이와 관련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000213] 외 5개의 의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상정되었음

73.8달러로, 연평균 5%의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베트남의 2018년 월최저임금 129~184달러⁸⁴⁾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해외근로자와 달리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제품 생산 시 불량률이 낮고 해외 공장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송비가 절감되며 주문에서 생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다.⁸⁵⁾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업종의 경우 매출원가율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이 투자처로서 장점을 지녔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제약이 크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기업이 신고한 피해액은 약 8천억 원에 달한다.⁸⁶⁾ 비록 정부가 경험보험 등을 통해 일부 손실액을 보상하였지만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설비를 투자하기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 가까운 남한 지역에 남북경협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⁸⁷⁾ 만약 남한 지역에 경험특구가 설립된다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것이고 이는 제조업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어 제조업의 공동화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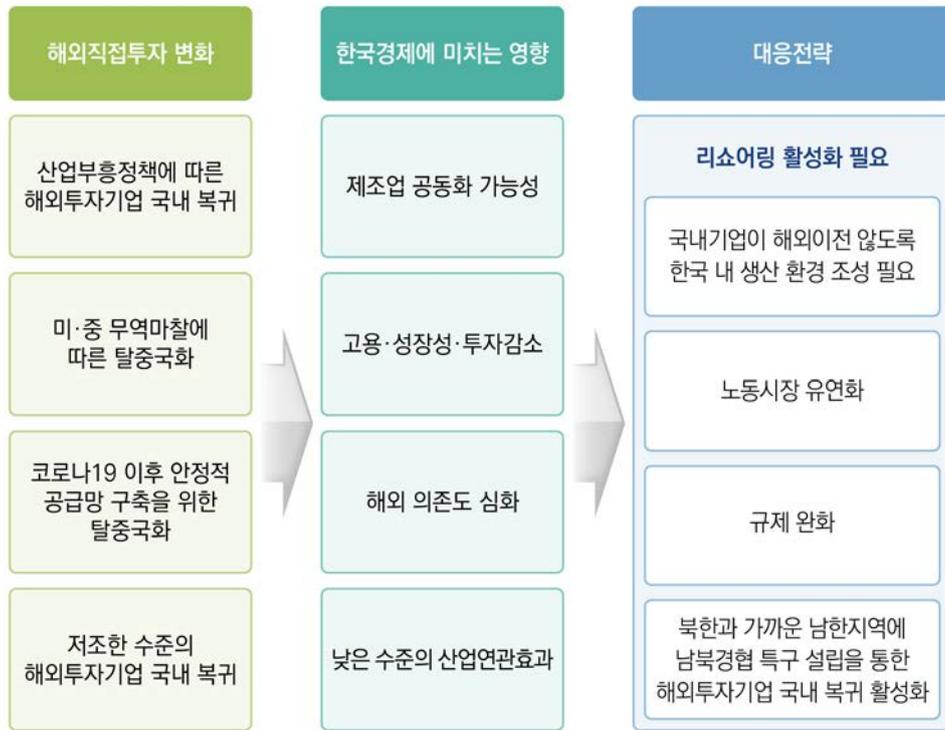
84) 이주현, “2019년 베트남 최저임금 5.3% 인상 예정,” KOTRA 해외시장뉴스, 2018.8.17.,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68963>, 접속: 2020.5.12.>

85) 황진훈·김현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성과 분석과 정책제언,”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2008.

86) 신호경, “개성공단 폐쇄 피해 1조5천억원 이상…1/3도 보상 못 받아,” 연합뉴스, 2017.2.7., <<https://www.yna.co.kr/view/AKR20170206171200030>, 접속: 2020.5.12.>

87) 물론 이 대안이 실현되기에는 해결해야 할 요건들이 존재. 예를 들면,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북한 근로자의 남한으로 이동이 허용과 1년 정도의 한시적인 체류가 허가되어야 할 것임. 또한 국내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대한 특례가 북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림 69] 리쇼어링 활성화



2.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의 둔화는 협소한 내수시장 위주의 서비스업,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으로의 종사자 이동, 설비 및 R&D 투자의 부진, 규제에 의한 경쟁 제한 등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서비스 업종 간 생산성의 격차는 임금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서비스업의 세계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세계화를 위한 육

성정책이 필요하다. 서비스업 중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이 발달하고 소득이 증대되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다만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업서비스처럼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해외에서 충당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협소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성장해 온 국내 서비스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운 제조업처럼 서비스업의 세계화를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컴퓨터서비스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 해당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아일랜드 정부는 낮은 법인세율, 높은 투자 인센티브, 효율적인 노동시장, 투명하고 편리한 납세행정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왔다. 한편 부가가치와 산업연관효과가 큰 정보·통신·컴퓨터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지적재산권 획득 및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국적 기업, 국내외 벤처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클러스터 중심의 연구개발 및 투자 생태계를 통해 집적이익 효과를 배가하였다. 무엇보다 서비스산업의 핵심인 고급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술교육을 강화하며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등 인력수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세계 연평균 성장률(6.8%)을 상회하는 10.9%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관련 서비스를 1,011억 달러(세계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 수출의 16.7%) 수출함으로써 해당 업종에서 세계 수출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⁸⁸⁾ 참고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 수출액이 48억 달러로 세계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 수출의 0.8%에 불과하다.

88) 장현숙·이준명·김보경, “서비스 산업별 수출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20, 10~21쪽.

[그림 70] 서비스업의 세계화 전략



나. 서비스업의 투자 확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설비 및 R&D 투자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 체감으로 인해 노동력의 추가 투입만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업의 영세성,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취약, 의료·보건·보육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이 민간부문의 서비스 투자 증가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 서비스 투자의 마중물로서 정부 서비스 육성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4가지 분야(서비스 R&D 지원, 서비스산업 차별완화, 서비스교역(해외진출) 활성화, 규제개혁 추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⁸⁹⁾ 우선 정부는 서비스R&D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서비스 R&D 투자자금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 차별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도 금융 및 재정

89) 자세한 사항은 박정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추진 방향 모색: 주요 지원정책의 성과 및 한계」, 산업연구원, 2015, 101~102쪽) 참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서비스업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금융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서비스시장의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2014년 기준 151건의 규제를 폐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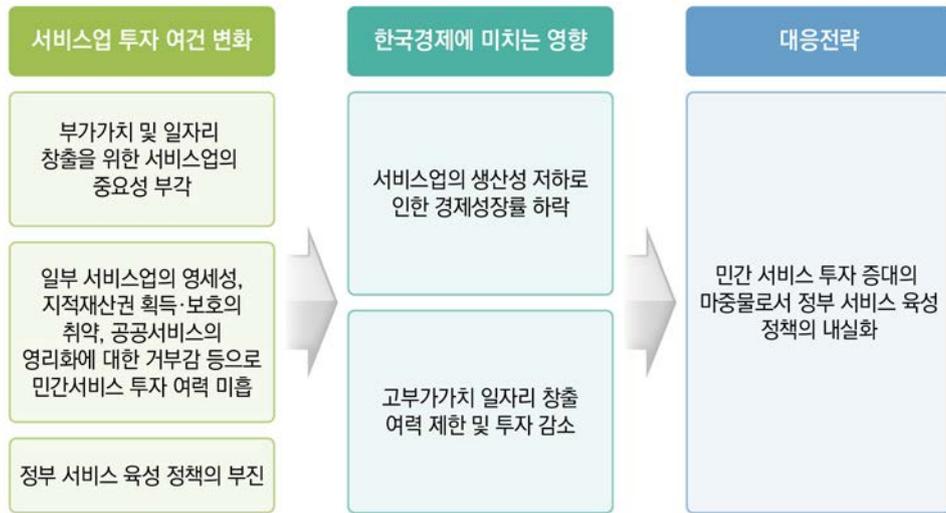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체감하기에 정책 효과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초연구 보다 기술기반 위주의 서비스 R&D 지원과 사업화 연계성 미흡, 제조업에 비해 부족한 서비스업의 보증 공급,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과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업종과 지역의 편중, 규제개혁 지원에 따른 유망 서비스업의 투자 부진 등을 들 수 있다.⁹⁰⁾

이에 정부는 최근에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확대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지원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 해소, 표준화·정보화·연구개발을 통한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화,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체감형 성과 도출 등이다.

다만 이처럼 확대된 지원들이 제조업과 다른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서비스분야의 혁신은 기술혁신 자체 보다 비기술혁신,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모델, 유통방법, 고객 인터페이스에 대한 솔루션, 공급사슬, 서비스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법 등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이질적인 업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일부 서비스 업종 또는 특정 기업군에 편중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서비스 투자를 촉진하고 서비스업계 전반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90) 박정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추진 방향 모색: 주요 지원정책의 성과 및 한계」, 산업연구원, 2015, 17쪽.

[그림 71] 서비스업의 투자 증대 전략



다. 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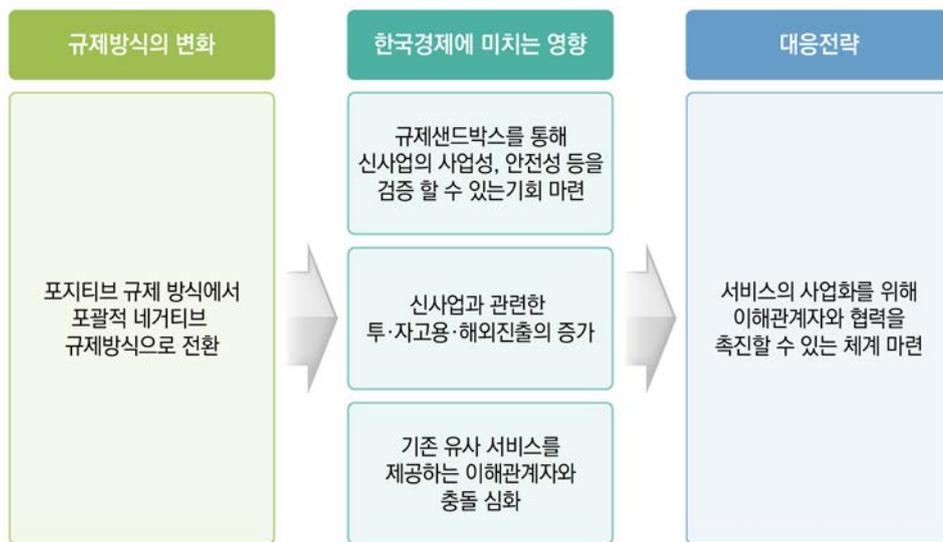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산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규제완화에 대한 해당 산업의 반응은 높은 것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지 1년 동안 102건의 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36건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고용이 증대되었고 해당 서비스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등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 운영방식이나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T나 타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사업을 시작한 후에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 미리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

91) 김진술, “금융규제 샌드박스 에 날개단 핀테크 기업들,” 매일경제, 2020.5.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93598/>>, 접속: 2020.6.29.>

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호주의 우버서비스 도입과정을 들 수 있다. 호주에서도 우버서비스가 처음 도입될 때 택시업계의 반발이 컸다. 이에 호주 정부는 우버서비스에 부담금을 도입하였고 이를 일정 기간 적립하여 기금화한 후 택시업계를 위해 쓰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또한 호주 정부는 택시업계에도 면허 관련 세금을 낮춰 주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우버서비스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결과적으로, 호주 정부의 중재 노력은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사회적 후생과 관련 산업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⁹²⁾ 따라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검증할 기회를 마련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72] 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 전략



92) 최중희, “호주 차량공유 안착, 택시vs우버 '정부 중재' 큰 역할,” 전자신문, 2019.12.4.
 <<https://m.etnews.com/20191204000075?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yZSI7fQ%3D%3D>, 접속:2020.6.1.>

3. 내수와 수출간 균형 성장 모색

가. 내수시장 확대

최근 세계 무역의 성장 정체, 보호무역주의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국경제의 고도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를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의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내수부문을 활성화하고 성장시켜 수출과 내수간 균형적 성장 구조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내수확대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경제규모에 맞는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⁹³⁾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장기간 지속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기반은 취약한 편으로 내수부문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수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수확대를 견인할 주력산업 육성,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 모색, 안정적 수요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우선,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할 주력산업을 찾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요 및 변화방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잠재수요가 크지만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충분히 소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여행, 여가 및 문화 산업, 고령화 대비를 위한 헬스케어 산업 등과 관련된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내수 관련 주력산업의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과 내수가 균형있게 성장을 이끌어가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내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이 위축될 경우 내수성장이 제한될 것이다. 원천기술과 관련된 R&D 투자 확대, 민간부문의 혁신을 유도하는 경영여건 조성 등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내수지원 정책이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도 필요하다.

셋째, 내수시장 창출을 위한 안정적 수요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소비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보장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소비심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출주도 성장을 장기간 지속하는 과정에서 내수부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나 경제시스템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주권을

93) 이근테 외.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내수성장,” 「LGERI 리포트」, 2014.

강화하고 소비관련 산업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도 바뀌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경제와 무역부문의 균형성장 및 수출증대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생산 증가 → 수출 증가 → 설비투자 및 소득 증대 →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수 있다.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세제혜택 등 경영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내 비영리기구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는 2010~2017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국내회귀를 결정하게 한 요인으로 ‘정부 인센티브’를 꼽은 바 있다.

[그림 73] 내수시장 확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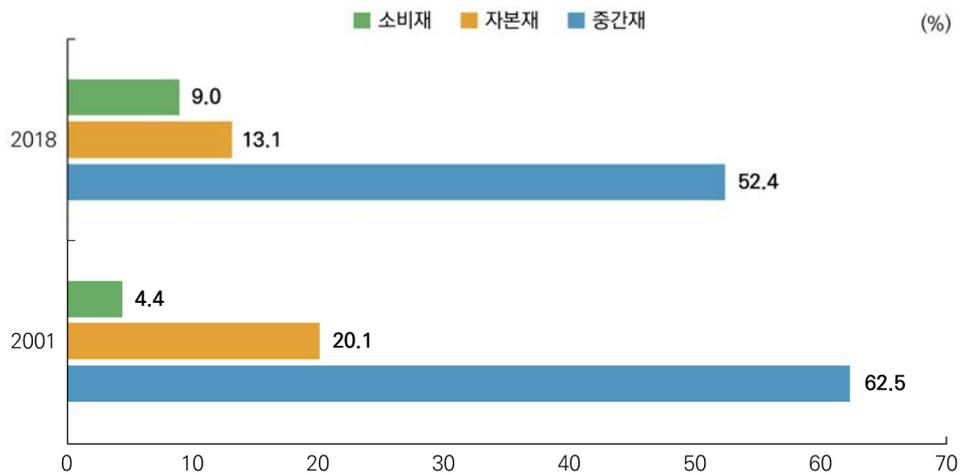
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1) 수출시장 다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품과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적 충격에 취약하고 의존도가 높은 수출시장의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양적성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축소하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과 수출시장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⁹⁴⁾ 최근 미·중, 한·일 무역갈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무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탈세계화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 다변화를 통한 위험 분산의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중국에 의존적인 수출 구조와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2018~2019년 기준 전체수출의 1/4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중간재 수출비중은 7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2001년 62.5%에서 2018년 52.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중국제조업이 고도화되면서 중국의 수입구조가 범용 중간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고위기술 중간재, 자본재 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74]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비중



자료: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에 고위기술 중간재와 자본재,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재 수출을 중심으로 대중국

94) 민혁기 외, “국제 무역·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2020.

수출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 정책 등으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소비재 수입비중이 2001년 4.4%에서 2018년 9.0%로 상승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이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소비재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토리텔링, 문화컨텐츠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브랜드 및 충성도 제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21] 우리나라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단위: 억 달러, %)

순번	품목명	수출액	점유율	누적점유율
1	전기기기 및 부분품	512	37.6	37.6
2	원자로, 보일러 등 기계류 및 부분품	196	14.4	52.0
5	유기화학품	112	8.2	60.2
3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101	7.4	67.6
4	광학·사진용기기, 측정·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부분품 등	98	7.2	74.8
6	광물성연료, 역청물질, 광물성악스	82	6.0	80.8
8	철강	32	2.3	83.2
7	정유, 화장품 등	30	2.2	85.4
9	무기화학품, 귀금속 등	21	1.6	87.0
10	구리 및 관련 제품	18	1.4	88.3
총 계		1,362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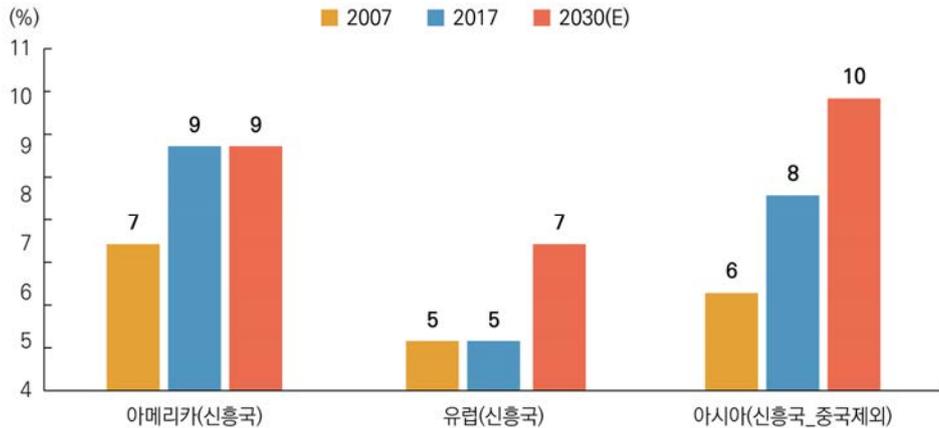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또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 유입이 확대되는 아세안 시장에서 글로벌 벨류체인이 공급망을 선점하고 기존에 중국시장을 공략하였던 범용중간재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이 글로벌 생산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의 범용중간재 수입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범용중간재의 수출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수입수요가 감소하는 중국에서 벗어나 아세안 및 여타 신흥국으로 수출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시장에 대한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 미국 등의 의존도가 높아 대외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MERCOSUR(남미공동시장),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등 경제권 뿐 아니라 유럽 신흥국,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 전략도 필요하다. 아메리카 지역, 유럽 신흥국의 글로벌 소비시장 점유율이 2007년 각각 7%, 5% 수준에서 2030년 9%, 7%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림 75] 지역별 신흥국의 글로벌 소비 점유율



자료: McKinsey & Company(2019)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 이외에 소비재 등의 수출확대 전략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수출품목의 수출 경쟁력은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발전전망이 높은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추세에 맞는 다품종 소량 생산형 수출 체제를 강화하고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중 수출 유망 품목 발굴, R&D 부문의 지원 강화,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및 진출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망을 활성화 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장 발굴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정보제공 및 지원 점점 확대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2) 수출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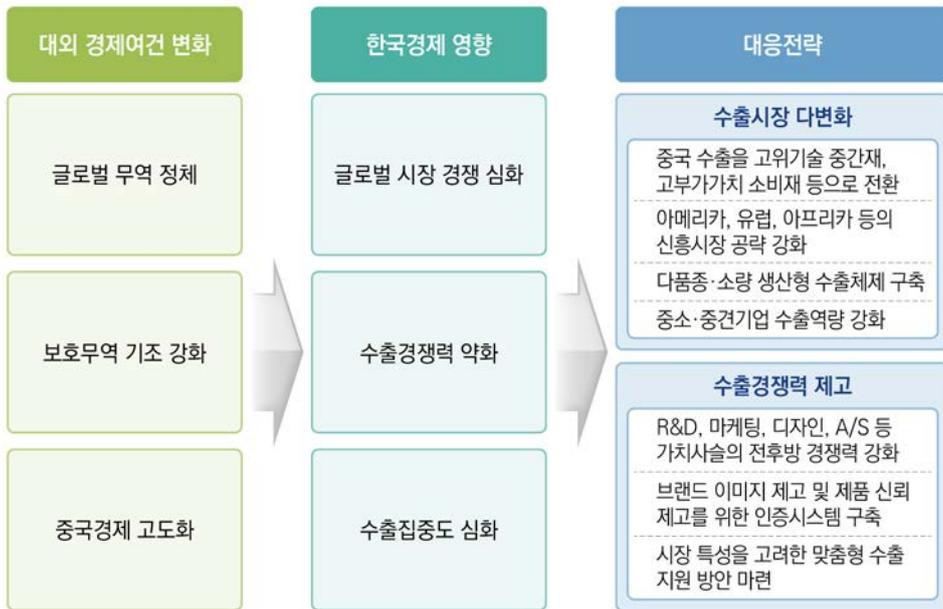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적 성장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및 부가가치 중심의 구조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신흥국의 경제성장 및 글로벌

벨류체인 편입 등에 따른 생산 역량 강화는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 위주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R&D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 뿐 아니라 마케팅, 디자인, A/S 등 가치사슬의 전후방 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재의 경우 품목별 특성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유통망 진출을 확대하고, 스토리텔링, 한류 등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의 제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국산 인증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수출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별 니즈가 다원화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대상 시장을 타겟팅하고 해당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76] 수출시장 다각화 및 제품 차별화 전략



다. 대외통상 강화를 통한 시장 접근성 제고

대외통상 강화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을 낮추고 시장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무역대상국에 특화된 통상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기업 및 소비자와 소통함으로써 통상정책 불확실성을 자체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외 여건에 민감한 수출입 품목을 산업별로 면밀히 파악하여 통상 정책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22] 우리나라 FTA/CEPA 체결현황

기체결(국가/지역)	협상중
(발효) 칠레, 싱가포르, ETFA ⁹⁵⁾ ,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서명) 영국 (타결)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협상중) 한중일, RCEP ⁹⁶⁾ , 에콰도르, MERCOSUR ⁹⁷⁾ , 핀리핀, 러시아, 말레이시아, ASEAN, 인도, 칠레, 중국 (협상재개·개시 여건조성) PA(Pacific Alliance) ⁹⁸⁾ , EAEU ⁹⁹⁾

자료: fta.go.kr

자유무역주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적 통상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고도화 및 신규 FTA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FTA는 보호무역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이므로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체결된 중국, ASEAN 등의 FTA의 고도화와 활용성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단계적 무역협정의 고도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필요시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통해 시장활용성 및 접근성을 높이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현재 논

95)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96)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제외 15개국):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97)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98)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등 4개국간 기체결된 자유 무역협정에 기초하여 역내 경제통합, 경쟁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확대를 지향

99)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EU)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중심이 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의 독립국가연합(CIS) 내 5개국으로 구성

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FTA 역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¹⁰⁰⁾ 우리나라의 교역 집중도를 고려해 중국, 아세안,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와의 통상환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림 77] 단계적 지역무역협정



자료: fta.go.kr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한편 보호무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G20, WTO 등 다양한 국가간 협의체 및 무역기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상하는 신흥국 시장 등에서 우리나라의 통상부문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¹⁰¹⁾ 사업의 효율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호혜적 통상정책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경제의 성숙도가 낮은 시장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산업부문 및 경제 발전에 참여해 중장기적 성과를 창출하는 호혜적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정부 부처, 기관,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일본, 대만 주요국 등은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관련 기관 뿐 아니라, 정책금융 기관, 산업진흥기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단순 수출마케팅 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장 개척, 경제협력 강화, 투자진출 지원 등 기업의 해

100) 민혁기 외, “국제 무역·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2020.

10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증여, 차관, 배상, 기술형태 등의 형태를 취함

외진출 및 현지화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¹⁰²⁾

우리나라도 주요 신흥국과 전략적 통상관계를 구축하고 정부·기관·기업간 협력체계를 통해 현지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인프라 사업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기존 제품 수출에서 탈피해 수출과 연계한 투자진출 등 현지화 중심의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78] 대외통상 강화를 통한 시장 접근성 제고



102) KOTRA, “주요국의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 다변화 전략,” 「Global Market Report」 17-025, KOTRA, 2017.6.

참고문헌

- 강성진·이홍식,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탈산업화에 미친 효과분석,” 「국제통산연구」, 2010.
- 규제개혁위원회, 「2018 규제개혁백서」, 2019.
- 김계환 외, 「산업고도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 한국의 경험과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4.
- 김종일,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2006, 1~58쪽.
- 김천근, 「서비스산업 육성 및 발전과제」, 산업연구원, 2018.
- 대한민국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2019.
- 민혁기·김재덕·신현수, 「글로벌 무역 정세하에서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와 수출확대 전략」, 산업연구원, 2017.
- 민혁기 외, 「국제 무역·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용역보고서, 2020.
- 박문수·이동희,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연계성 현황과 시사점」, 2017.
- 박승호, “수출이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NABO 경제동향&이슈」, 2018. 8.
- 박용민, “주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20-6, 2020.
- 박정수 외,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를 위한 창조성 활용 전략」, 산업연구원, 2014.
- 박정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추진 방향 모색: 주요 지원정책의 성과 및 한계」, 산업연구원, 2015.
- 박종현 외,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분석」, 한국은행, 2018.
- 산업연구원,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용역과제 최종 보고서, 2017.
- 오영석 외, “한국 산업의 경쟁력 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2017.
- 윤우진, 「한국과 주요 경제권의 국제 분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산업연구원, 2015.
- 이갑수,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론」, 대명, 2007.
- 이건우, “서비스화가 한국산업의 연관구조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4.

- 이근태 외,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내수성장,” 「LGERI 리포트」, LG경제연구원, 2014.
- 이부형,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6.
- 이세정 외, “주요국의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 다변화 전략,” Kotra, Global Market Report 17-025, 2017.
- 이은민,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통신방송정책」, 정보통신연구원, 2016, 1~22쪽.
- 이지평, “산업공동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3.
- 이한득,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속도는 줄고 집중도는 증가,” 「LGERI 리포트」, LG경제연구원, 2016.
- 장현숙·이준명·김보경, “서비스 산업별 수출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20, 10~21쪽.
- 정종인 외,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은행, 2007.
- 정영식, 「수출과 내수 간의 연계성 분석 및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11.
- 정희철 외,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국제무역연구원, 2020.
- 주원, “고용 탈(脫)공업화의 원인과 시사점,”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2010.
- 주현 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산업정책 연구」, 산업연구원, 2015.
- 천병철, “신종 감염병의 이해와 대비·대응 방안,” 「HIRA정책동향」 9권 5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 최낙균 외,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제17권 제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최성호 외,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모색」, 산업연구원, 2010.
- 통계청, 「한국의 서비스산업」, 2008.
- 한국은행, “2020년 이후 글로벌 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I),”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2020.
- 한성훈·임시영,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총요소생산성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조사월보」, 한국은행, 2008.
- KDB산업은행, “2020년 설비투자 전망,” 「산은조사월보」, KDB산업은행, 2020.
- KOTRA, “주요국의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 다변화 전략,” 「Global Market Report」 17-025, KOTRA, 2017.

- 小林秀夫, 産業空洞化の克服—産業轉換期の日本とアジア, 中公新書, 2003.
- Baldwin Richard and Weder Beatrice di Mauro,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 Economics in the Times of COVID-19*, CEPR Press, 매경출판번역, 2020.
- Bloom, D. E. et al., “Epidemics and Economics - New and resurgent infectious diseases can have far-reaching economic repercussions”, IMF Finance & Development, 55(2), pp.46-49, Jun. 2018
- Clark, C.,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London, Macmillian Press, 1957.
- Ernst, D.,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Industrial Upgrading*, 2001.
- Naicker, P. R.,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other factors on zoonotic diseases”, Archives of Clinical Microbiology, 2(2), 2011
- OECD, *Industry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OECD Review of Innovation Policy, 2014.
- Romer, P. M.,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part III, 1990, S71-S102.
- Rowthorn, R. E, and Rama Ramaswamy, “Deindustrialization : Causes and Implications”, Staff Studies for the Worl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IMF, 1997.
- Rowthorn, R. E., and J.R. Wells, *D-industrialization and Foreign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Schwab, K., “The Fourth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2016.
- Stiglitz, J, J. Y. Lin, C. Monga, *The Rejuvenation of industrial policy*,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628, The World Bank Development Economics Vice Presidency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2013.
- Summers, L. H. (2015), “Demand Side Secular Stagn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Vol. 105(5), pp. 60-65
- Wood, A., *North-South Trade, Employment and Inequality: Changing Fortunes in a Skill-Driven World*, Oxford, Clarendon Press, 1994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Ⅲ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발간일 2020년 8월 7일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80)

ISBN 978-89-6073-282-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

